

우리 **삶**을 바꾸는 **자치분권**

2021년 자치분권 시행계획

2021. 3.

목 차

제1장 시행계획의 개요

1. 추진배경	3
2. 추진경과	3
3. 추진목표 및 과제	5

제2장 과제별 시행계획

1. 주민주권 구현

1-1. 주민참여권 보장	11
1-2. 숙의 기반의 주민참여 방식 도입	15
1-3. 주민자치회의의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	18
1-4. 조례 제·개정 의 주민직접발안제도 도입	25
1-5. 주민소환 및 주민감사청구 요건의 합리적 완화	28
1-6. 주민투표 청구대상 확대	31
1-7.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	34

2.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

2-1. 중앙-자치단체 간 사무 재배분	39
2-2. 중앙권한의 기능 중심 포괄 이양	42
2-3. 자치분권 법령 사전협의제 도입	46
2-4.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	50
2-5. 대도시 특례 확대	53
2-6.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	56
2-7. 교육자치 강화 및 지방자치와의 연계·협력 활성화	61

3.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

3-1. 국세·지방세 구조 개선	69
3-2. 지방세입 확충 기반 강화	72

3-3.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	77
3-4. 국고보조사업 개편	80
3-5. 지방교부세 형평 기능 강화	84

4. 중앙-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

4-1. 중앙-지방 협력기구 설치·운영	89
4-2. 자치단체 간 협력 활성화 지원	92
4-3. 제주·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	97

5.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

5-1.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의정활동정보 공개	109
5-2. 자치조직권 강화 및 책임성 확보	114
5-3. 지방인사제도 자율성 및 투명성 확보	119
5-4. 지방공무원 전문성 강화	123
5-5.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 제고	125
5-6. 지방재정정보 공개 및 접근성 확대	128
5-7. 자치분권형 평가체계 구축	132
5-8. 자치단체 형태 다양화	136

6.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

6-1.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 모색	141
6-2.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 모색	144

제3장 향후 조치계획

1. 계획 수립 및 이행 절차	149
2. 일정별 조치 계획	149

< 참고자료 >

1. 과제별 주관부처 및 협조부처	153
2. 추진과제별 일정표	160

제1장 시행계획의 개요

I

추진배경

□ 목 적

- 중앙-지방의 동반자 관계 확립, 주민자치 강화 등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종합계획 확정('18.9.11.)에 따라,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·추진

□ 근 거

- 『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』

- 제5조(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수립) ①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제6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매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II

추진경과

□ 『자치분권 종합계획』 수립·발표

- 자치분권위원회 심의·의결('18.4~8월)
-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자치분권위원회 의결('18.8.24.)
- 국무회의 심의·의결로 종합계획 확정, 대국민 발표('18.9.11.)
 - 6대 추진전략, 33개 추진과제

□ 『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』 수립 · 추진

- 『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』 수립('19.2월)
- 『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』 이행상황 점검·평가('19.11~12월)

□ 『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』 수립 · 추진

- 『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』 수립('20.7월)
- 『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』 이행상황 점검·평가('20.12~'21.3월)
 - ※ 자치분권 종합계획 연도별 추진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2020년 시행계획 평가와 동시에 2021년 시행계획 수립 추진

□ 『2021년 자치분권 시행계획』 수립

- 대상과제 : 『자치분권 종합계획』 32개 추진과제*, 102개 단위과제**
 - * 총 33개 추진과제 중 '20년 완료 과제 1개 제외
 - ** 총 133개 단위과제 중 '19년 완료 16개, '20년 완료 15개 단위과제 제외
- 대상기관 : 6개 기관
 - 국무조정실, 기획재정부, 교육부, 행정안전부, 경찰청, 자치분권위원회
- 진행경과
 - 『2021년 자치분권 시행계획』 수립 지침 마련·통보('20.12.18.)
 - 과제 소관부처 실천계획 작성·제출(~'21.1.20.)
 - 기획단 - 과제 소관부처 간 협의 및 기획단 실무회의(~'21.2.17)
 - 3개 분과위원회별 소관과제 심의·의결(~'21.2.19.)
 - * 자치제도분과위('21.2.18.), 재정·기능이양분과위·자치혁신분과위('21.2.19.)
 - 본회의 심의·의결('21.2.26.)

Ⅲ

추진목표 및 과제

비전

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

목표

주민과 함께 하는 정부 · 다양성이 꽃피는 지역 · 새로움이 넘치는 사회

추진과제

1. 주민주권 구현

- ① 주민 참여권 보장
- ② 숙의 기반의 주민참여 방식 도입
- ③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
- ④ 조례 제·개정인 주민직접발안제도 도입
- ⑤ 주민소환 및 주민감사청구 요건의 합리적 완화
- ⑥ 주민투표 청구대상 확대
- ⑦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

2.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

- ① 중앙-자치단체 간 사무 재배분
- ② 중앙권한의 기능 중심 포괄 이양
- ③ 자치분권 법령 사전협의제 도입
- ④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
- ⑤ 대도시 특례 확대
- ⑥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
- ⑦ 교육자치 강화 및 지방자치와의 연계·협력 활성화

3.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

- ① 국세·지방세 구조 개선
- ② 지방세입 확충 기반 강화
- ③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
- ④ 국고보조사업 개편
- ⑤ 지방교부세 형평 기능 강화
- ⑥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및 합리적 개편

4. 중앙-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

- ① 중앙-지방 협력기구 설치·운영
- ② 자치단체 간 협력 활성화 지원
- ③ 제주·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

5.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

- 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의정활동정보 공개
- ② 자치조직권 강화 및 책임성 확보
- ③ 지방인사제도 자율성 및 투명성 확보
- ④ 지방공무원 전문성 강화
- ⑤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 제고
- ⑥ 지방재정정보 공개 및 접근성 확대
- ⑦ 자치분권형 평가체계 구축
- ⑧ 자치단체 형태 다양화

6.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

- ①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 모색
- ②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 모색

제2장 과제별 시행계획

1. 주민주권 구현

1-1. 주민 참여권 보장

1-2. 숙의 기반의 주민참여 방식 도입

1-3. 주민자치회의의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

1-4. 조례 제·개정의 주민직접발안제도 도입

**1-5. 주민소환 및 주민감사청구 요건의
합리적 완화**

1-6. 주민투표 청구대상 확대

1-7.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

(1-1) 주민 참여권 보장

1 종합계획 주요내용

< 기본 방향 >

- 지방자치법의 목적에 '주민자치' 원리 강화
 - 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참여권 보장 등 주민참여의 실질화
-
- (주민자치 원리 강화) 지방자치에 주민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목적 규정에 '주민자치' 원리 강화
 - (주민 참여권 신설) 주민이 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신설하고,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종합규정 마련
 - (지역별 자치분권협의회 구성·운영) 자치분권과제에 대한 정보 교환, 정책제안, 의견수렴 등을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별 자치분권 협의회 구성·운영

※ 자치분권위원회는 지역별 자치분권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 지원

2 2021년 추진 목표

- 지방자치정보 공개를 위한 방안 마련 및 의견수렴 실시
- ① 지방자치정보 공개를 위한 후속조치 방안 마련
 - 지방자치정보 공개 내용, 방법 등 의견수렴 실시
 - 지방자치정보에 대한 주민접근성을 제고하는 정보공개시스템 운영 방안 마련

○ 지역별 자치분권협의회 구성·운영

① 지역별 자치분권협의회 구성 지원

- 자치분권 정책에 대한 일반국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자치분권협의회 조기구성 및 지방분권 촉진 관련 조례 제정 지원(연 20개)

② 지역별 자치분권협의회 운영지원

-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분권협의회를 중심으로 주민, 전문가 등 자치분권을 위한 소통 및 정책 공감대 형성 활동(간담회·토론회) 지원(연 20회)

③ 지역별 자치분권협의회 담당자 교육 및 워크숍

- 분권협의회 활성화 방안 및 자치분권 정책 홍보 논의를 위한 위원회·정부부처·지자체 공무원들과의 집중토론 워크숍 개최(연 4회)

④ 지역별 자치분권협의회 모니터링

- 지역별 분권협의회를 지역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사례분석(광역2, 기초2)

3

2021년 추진 방안 및 일정

□ 주민참여권 신설

① 정보공개 종합규정 마련

- 지방자치정보 공개를 위한 방안 마련(~'21년)
- 지방자치정보 공개 세부 내용, 방법 등 의견수렴 실시(~'21년)

□ 지역별 자치분권협의회 구성·운영

① 지역별 자치분권협의회 구성 및 운영

- 지역별 자치분권협의회 구성(~'21.12월)
 - 구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 협의(~'21.8월)
 - 자치협의회구성 및 운영 관련 컨설팅(~'21.12월)
- 지역별 자치분권협의회 간담회·토론회 지원
 - 간담회·토론회 개최를 위한 의견수렴 및 수요조사('21.3월)
 - 간담회·토론회 개최 추진계획(안) 마련('21.4월)
 - 간담회·토론회 운영 지원(~'21.12월)
- 지역별 자치분권협의회 담당자 교육 및 워크숍
 - 교육·워크숍 개최를 위한 의견수렴 및 수요조사('21.3월)
 - 교육·워크숍 개최 추진계획(안) 마련('21.4월)
 - 교육·워크숍 개최(~'21.12월)
- 지역별 자치분권협의회 모니터링
 - 모니터링을 위한 사례선정(광역2, 기초2)('21.3월)
 - 지역별 협의회 모니터링(~'21.11월)
 - 개선사항 검토 및 모니터링 사례 발간(~'21.12월)

4

향후 추진 방안 및 일정

< 2022년 >

□ 주민참여권 신설

① 정보공개 종합규정 마련

-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정보에 대한 주민접근성을 제고하는 정보공개시스템 운영 추진(~'22년)

□ 지역별 자치분권협의회 구성·운영

① 지역별 자치분권협의회 구성 및 운영

○ 구성 및 운영 관련 컨설팅(~'22년)

- 확산 및 정착, 종합평가(성과 및 과제)

○ 지역별 자치분권협의회 간담회·토론회

- 간담회·토론회 운영 지원을 통한 자치분권 정책 범국민 의견수렴 및 확산 방안 도출(~'22년)

○ 지역별 자치분권협의회 담당자 교육 및 워크숍

- 교육 및 워크숍을 통한 자치분권 자치단체 및 공무원 의견수렴 및 확산 방안 도출(~'22년)

○ 지역별 자치분권협의회 모니터링

- 협의회 모니터링을 통한 자치분권 추진방향 등 중장기 비전설정 및 제안(~'22년)

5

단위과제별 일정표

세부 추진과제	단위과제	'19년	'20년	'21년				'22년
				1/4	2/4	3/4	4/4	
1. 주민자치 원리 강화	① 주민자치 원리 강화 (20년 완료)							
2. 주민 참여권 신설	① 주민참여 권리 신설 (20년 완료)							
	② 정보공개 종합규정 마련							
3. 지역별 자치 분권협의회 구성·운영	① 지역별 자치분권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원 추진							

(1-2) 속의 기반의 주민참여 방식 도입

1 종합계획 주요내용

< 기본 방향 >

- 소통과 토론에 기반한 속의 민주주의 중심의 주민참여 확산으로, 지역 공동체 회복 및 갈등해소
- 주민들이 합의된 집단적 의사를 형성하도록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 결정과정에 반영

- (적용 대상) 공공시설의 설치, 주요 공유재산의 매입·매각 등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한 정책현안 등
- (유형) 공론조사, 합의회의, 주민배심 등 다양한 방법 활용
- (요건) ①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는 대표성 있는 다수의 주민, ② 충분한 토의기회 및 정보 제공, ③ 정보에 근거한 공적 판단
- (자치단체 지원) 주민참여 운영사례 및 매뉴얼 제공,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 등

※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‘주민참여 기본조례’ 및 ‘주민 기본계획’ 등이 일부 자치단체에서 제정되어 시행중이나 확산 미흡(약 20%)

2 2021년 추진 목표

- 속의 방식 관련 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 지원을 통해 주민참여를 직접 추진하는 담당자의 역량강화 지원
 - 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과정 개설(지방자치인재개발원)
-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를 통해 관련 성과 사례를 발굴하고 적극 공유하여 속의 기반 주민참여 방식의 확산 도모

① 숙의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공무원 교육 지원

- 지자체 공무원 대상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 운영 지원('21.상반기)

※ 전문교육과정(3일), 가칭 『숙의기반 주민참여 : 영상으로 보는 숙의』 과정

- 시·도교육원 교육수요 조사 및 지역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 지원('21.하반기)

※ 교육발전협의회(시도공무원교육원 참여) 안건 상정('21.9월)

② 숙의기반 주민참여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

- 경진대회 개최를 통한 지자체 주민참여 우수사례 발굴('21.11월)

< 2022년 >

① 숙의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공무원 교육 지원

- 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 확대

- 지자체 수요 등을 반영하여 시·도교육원 신규과정 개설

② 숙의 기반 주민참여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

- 경진대회 개최를 통한 주민참여 지자체 우수사례 발굴('22년)

- 지역별·분야별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 갈등 해결사례 등

세부 추진과제	단위과제	'19년	'20년	'21년				'22년
				1/4	2/4	3/4	4/4	
1. 숙의 민주주의 중심의 주민참여 확산	① 숙의 기반 주민참여 운영 매뉴얼 및 제도화 방안 마련 (‘20년 완료)							
	② 숙의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공무원 교육 지원							
	③ 숙의 기반 주민참여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							

(1-3)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

1 종합계획 주요내용

< 기본 방향 >

- 주민자치회의의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 등 주민자치 확산
- 주민참여 중심의 행정혁신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가치 구현

《 주민자치회의의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 》

- 주민자치 대표기구로 주민자치회 설치 확대
- 주민자치회의의 주민참여예산 의견반영, 공공시설 위·수탁 업무수행, 자치규약 제정 등 실질적 역할 및 권한 부여
 -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설치·운영, 기능, 재정지원 근거 등 규정
 - ※ 현재 주민자치위원회, 주민자치협의회 등 다양한 명칭을 주민자치회로 일원화
- 주민자치회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마련
 - 마을 유형별* 다양한 운영모델 개발, 주민조직 간 통합방안, 읍·면·동장 주민추천제 도입 등 제도개선 추진
 - * 대도시형(예 : 아파트자치회 등), 농촌형 등
 - 주민자치회에 대한 교육, 홍보, 행·재정지원 등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

《 주민참여 중심의 행정혁신 》

- 주민자치회와 지역 내 공공 및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
 - 고용, 복지, 문화 등 행정서비스 추진과정에 주민자치회의의 참여·소통·협력 강화

- 각 부처 마을단위 지원사업 간 연계 강화 및 주민요구,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마을 조성 지원
 - 주민자치회 등이 마을의제를 수립하고, 선정된 마을계획*에 대해 이행 지원
 - ※ 마을기업 육성(행정안전부), 문화마을 조성(문화체육관광부) 등
- 마을 단위 지역사업에 대한 지원체계 개선
 - 마을 단위 지역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추진단계별로 주민자치회 등 주민참여 절차 강화 추진
 - ※ 지역사업 추진단계별로 주민자치회 등이 참여하는 표준절차를 마련하고,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마을활동가 네트워크를 권역별로 구축
- 주민 전자투표 등 모바일 주민참여시스템* 도입 검토
 - * 주민 공모사업, 이·통장 선출 및 마을 현안에 대한 전자투표 등

2 2021년 추진 목표

- 『지방자치법』 개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본격실시 준비
-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 확대 및 제도 개선
- 지역사업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5개 부처 협력체계 구축
 - 5개 부처 협력체계 기반 시범 공모사업 대상 지자체 선정('21.2월)
- 주민과 지역사회 관점의 부처 지역사업 정보자료집 제작
 - 정보자료집 제공('21.4월)
- 주민자치회와 지역 내 공공 및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
 - 25개 내외 시군구에서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공모사업 추진('21.3~12월)

□ 주민자치회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

① 주민자치회 설치 및 재정지원 근거 마련

- 주민자치회 기본사항(구성, 사무 등)과 자치단체의 행·재정적 지원 근거 신설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(~'21년)

② 주민자치회 제도 개선 및 활성화

-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 확대(~'21년)

※ 자치단체로부터 시범실시 신청, 수시접수 및 검토기준 배포를 통해 매월 추가지정 예정

-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표준조례안 개정('21.4월)

- 국회 심의 시 지적사항* 반영

* 주민자치위원회와의 관계 명확화, 기능 차별화, 정치적 중립 등

- 주민자치회 마을 유형별 운영모델 개발 및 우수사례 홍보

- 자연부락(통·리)·공동주택(아파트)·학교·주민자생조직과의 연계 및 관련 우수사례 정리 및 안내(~'21년)

□ 주민참여 중심의 행정혁신

① 마을 단위 지원사업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범정부 협력 강화

- 지역지원사업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5개 부처(행안·국토·복지·농림·교육) 정책의 연계·협력 추진
- '21년 5개 부처 협력형 『소지역 내 다부처 정책연계 체계 구축』 지원사업 추진('21.2월~)

- 주민과 지역사회 관점의 부처 지역사업 정보자료집 제작
 - 부처별 지역사업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지역사업 내용·절차 등을 체계화·집약하여 지역사회에 공유
 - 부처별 지역사업 조사('21.2월) → 지역사업 정보 종합정리 및 공유('21.4월)
 - ※ '20.3.6. 관계부처 지역사업 지자체 공유(11개 부처 40개 사업)

② 주민자치회와 지역 내 공공 및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

-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추진
 - 지역여건·특성에 맞는 공공서비스 연계 사업 구현을 위한 자치단체 공모 및 선정('21.1~2월)
 - 선정 자치단체 국비 교부('21.3월)
 - 선정 자치단체 대상 설명회 개최('21.4월)
 - 공공서비스 제공기관의 실행역량 제고를 위한 관련분야 맞춤형 컨설팅 및 사업 진행상황 모니터링('21.4~12월)
 - 사업평가 및 우수사례 발굴('21.11~12월)

4

향후 추진 방안 및 일정

< 2022년 >

□ 주민자치회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

- 주민자치회 제도 개선 및 활성화(계속)

□ 주민참여 중심의 행정혁신

① 마을 단위 지원사업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범정부 협력 강화

- 5부처 협력사업의 다부처 확대 추진
- 주민관점의 부처 지역사업 연계 지원
 - 부처별 소지역 대상 사업 집약 및 유형화·체계화(~'22년)

② 주민자치회와 지역 내 공공 및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

○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추진

- 지역여건·특성에 맞는 공공서비스 연계 사업 구현을 위한 자치단체 공모 및 선정('21.1~2월)
- 선정 자치단체 국비 교부('21.3월)
- 선정 자치단체 대상 워크숍 개최('21.4월)
- 공공서비스 제공기관의 실행역량 제고를 위한 관련분야 맞춤형 컨설팅 및 사업 진행상황 모니터링('21.4~12월)
- 사업평가 및 우수사례 발굴('21.11~12월)

5

단위과제별 일정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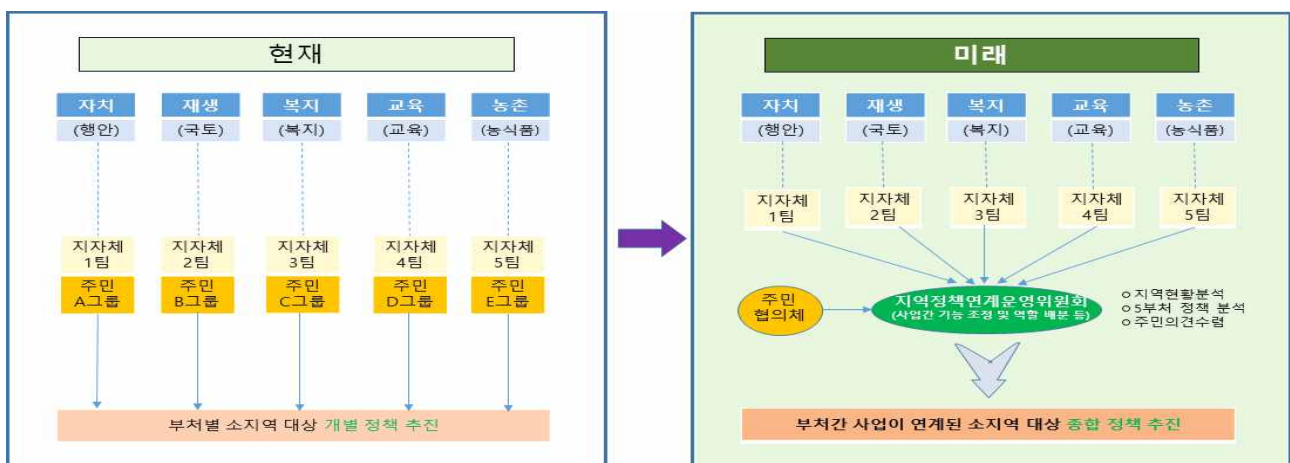
세부 추진과제	단위과제	'19년	'20년	'21년				'22년
				1/4	2/4	3/4	4/4	
1. 주민자치회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	① 주민자치회 본격실시 근거 마련							
	② 주민자치회 제도 개선 및 활성화							
2. 주민참여 중심의 행정혁신	① 마을 단위 지원사업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범정부 협력 강화							
	② 주민자치회 지역 내 공공 및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							
	③ 주민 전자투표 등 모바일 주민참여 시스템 도입 ('19년 완료)							

참고 소지역 내 다부처 정책연계 체계 구축 지원사업 계획

□ 추진배경

- 복잡한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 간 정책연계를 통한 문제해결이 필요하나, 다수의 부처 지역사업은 개별적으로 추진 중
 - 특히, 소지역 생활권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각종 정부 지원정책을 기초지자체가 그 지역 특성에 맞게 기획·적용하는 역량도 부족
 - 이로 인해 자원이 적재적소에 집행되지 못하는 등 정책 비효율성 발생
- 정부는 5부처 MOU*를 토대로 다부처 협력사업을 추진 중인 만큼, 이러한 사업이 현장에서 원활히 연계되도록 하는 지원 인프라 필요
 - * 자치·돌봄·재생·교육 등 부처 지역사업의 원활한 연계 협력을 위해 행안·교육·농식품·복지·국토부 등 5개 부처 간 협약 체결('20.3월)

□ 사업개요



- (사업 목표) 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부처별 지역사업을 지역 특성과 주민 정책 수요를 토대로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종합적으로 추진 되도록 하는 지역사업 연계 현장지원시스템 구축
- (사업기간) 2021년 ~ 2022년
- (지원 형태) 지자체 보조(50%) ※ '21년 예산안 국비 500백
 - 현장센터 운영비, 인건비, 협의체 운영, 워크숍, 교육, 자료 제작 등

□ 사업 세부내용

① 사업 추진 절차

- 5부처 합동 사업*을 선정·공모하고, 공모에 참여한 지자체 중 다시 사업연계 시너지효과가 큰 지역을 5부처가 함께 최종 선정

* (행안부)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, (교육부)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, (농식품부)사회적농업 활성화, (복지부)지역사회 통합돌봄, (국토부)도시재생 뉴딜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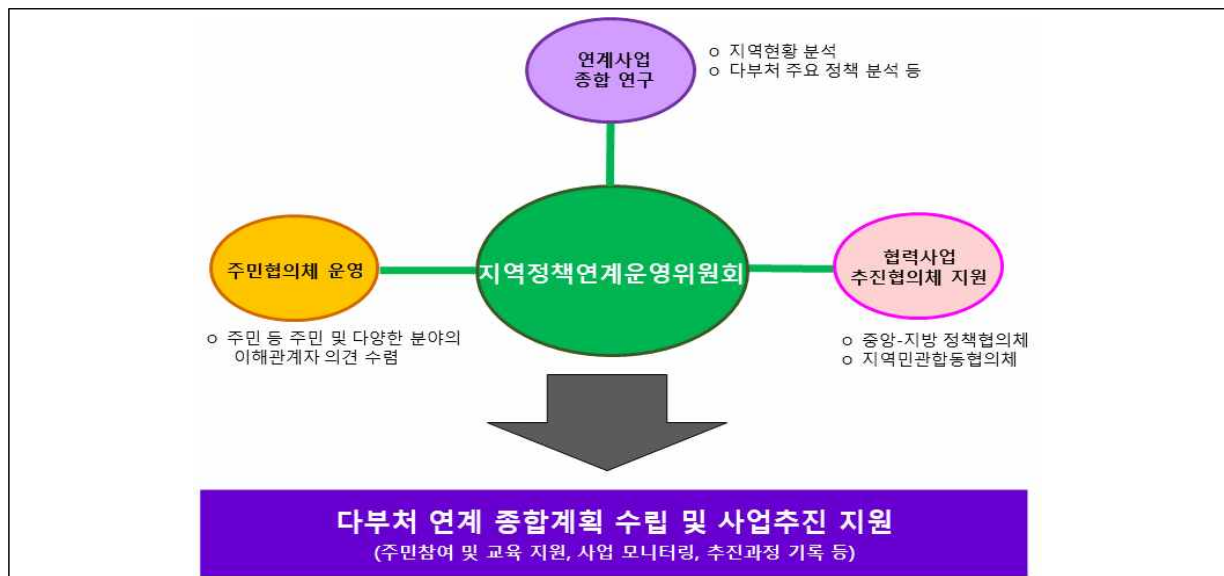


- 선정된 지역은 지역정책연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 사업을 종합 관리

② 지역정책연계운영위원회 구축·운영

- (다부처 연계사업 기획·관리 TF) 다부처 사업을 종합 기획·관리·지원 하는 한시적 지원 TF 구축 * (구성) 지자체 + 민간전문가(대학·연구기관 등)
- (다부처 정책연계 종합계획 수립) 부처 정책, 지역 현황, 지역 의견 수립 등을 종합 분석하여 효과적인 정책연계 추진계획 수립
- (협력사업 추진공동협의체 운영) 지역 이슈 발굴 및 선정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협력사업 추진협의체 운영 지원
 - * 중앙-지방협의체, 지역민관합동협의체, 주민협의체 등

< 지역정책연계운영위원회 역할(안) >



(1-4) 조례 제·개정 주민직접발안제도 도입

1 종합계획 주요내용

< 기본 방향 >

-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 제정·개폐를 청구하고, 청구요건 및 절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
- (제도 도입) (가칭) ‘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’을 제정, 주민에게 조례의 제·개정 및 폐지(안) 제출권 부여 및 청구연령 하향 검토
- (청구요건 완화) 인구 요건 상한만 규정하는 등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
- (전자서명 도입) 조례개폐청구 서명 요청에 있어서 공인전자서명을 통해 온라인으로 서명할 수 있는 시스템* 운영
- * 자치단체 전산망인 『서울시스템』과 연계하여 의안발의의 모든 절차를 전자적으로 확인하고 진행

2 2021년 추진 목표

- 주민조례발안 활성화를 위한 『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』 제정 추진
 - 청구연령 하향 조정(19세→18세),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발의 (現 단체장 경유), 서명자 수 요건을 인구 규모별로 세분·완화 등
- 법안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국회 설명 및 대응(법안 통과 불발시 대안 마련 노력 필요 등)

□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제도 개선

① 청구 요건 및 절차 완화(『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』 제정)

○ 청구요건 세분화 및 완화

- 청구 연령을 『공직선거법』 선거 연령과 일치(19세→18세)
- 광역-기초 2단계로 구분된 청구 서명요건을 인구규모별로 세분화, 법률에 상한만 규정하여 자치단체 자율성 강화

《 서명 요건 개정 전후 비교 》

현 행			개 선			
구분(인구수)		서명비율	구분(인구수)	서명비율	지자체수 (기총족수)	효 과
광역		1/100 ~ 1/70	800만 이상	1/200 이하	2	50% 감소
기초	50만 이상市	1/100 ~ 1/70	100만 이상 800만 미만	1/150 이하	19(2*)	33% 이상 감소
	기타	1/50 ~ 1/20	50만 이상	1/100 이하	21(11)	10개 50% 감소
			10만~50만	1/70 이하	110	29% 이상 감소
			5만~10만	1/50 이하	39(15)	24개 20~60% 감소
			5만 미만	1/20 이하	(52)	현행 유지

* 세종(1/100~1/20), 제주(1/110 이하)는 특별법에 의해 별도로 규정

○ 청구절차 간소화 및 지원 강화

- 단체장을 경유하지 않고 청구인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 청구, 주민조례청구 보장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필요 조치 의무화

○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이행력 강화

- 조례안에 대해 1년 이내 심의·의결 의무화(필요 시 1년 연장 가능), 의원임기 만료 시 차기의회에 한하여 계속 심사

< 추진 일정 >

- ▲ 『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』 제정안* 국회 통과 지원(~'21.6월)
 - '21년 상반기 내 법률안 통과를 위해 국회 방문 및 설명 등 적극 추진 * '20. 7. 3. 국회 제출
- ▲ 국민적 관심 확대 및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
 - 법률안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대국민 홍보 및 지자체 담당자 교육 지속 추진(연중)
 - 법률안 통과 시 정책기반 조성 및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정비 및 참고 자치법규안 마련·배부(~'21.9월)

4

향후 추진 방안 및 일정

< 2022년 >

□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제도 개선

① 청구 요건 및 절차 완화

- 『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』 제정안 시행('22.1월~)
 - 대국민 홍보 및 지자체 담당자 교육 지속 추진(계속)

5

단위과제별 일정표

세부 추진과제	단위과제	'19년	'20년	'21년				'22년
				1/4	2/4	3/4	4/4	
1.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제도 개선	① 청구 요건 및 절차 완화							

(1-5) 주민소환 및 주민감사청구 요건의 합리적 완화

1 종합계획 주요내용

< 기본 방향 >

- 지방선거직(단체장, 의원)에 대한 실질적 견제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주민소환 및 주민감사청구 제도의 실효성 제고

○ 주민소환제도 개선

- 자치단체의 인구 등 규모에 따라 청구요건(서명인 수) 및 개표요건 하향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
- 주민소환 청구 대상자에 비례대표 지방의원 확대 검토
- '주민소환투표운동 및 서명요청활동의 제한' 규정 개선 검토

○ 주민감사청구제도 개선

- 자치단체 조례 제·개정 평균 청구인수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 수*를 하향 조정하고, 청구연령 하향 검토
 - * (시·도) 500명 → 300명, (50만 이상 대도시) 300명 → 200명, (시·군·구) 200명 → 150명
- 감사청구 가능 기간을 2년에서 3년*으로 연장
 - * 『지방공무원법』 제73조의2의 징계시효(3년)와 동일하게 조정

2 2021년 추진 목표

□ 주민소환제도 개선

- 주민소환 청구요건 차등화 및 개표요건·확정요건 완화, 전자서명 청구제도 도입 및 서명요청활동 확대 등 주민소환법 개정 추진(~'21.12월)
 - ※ 『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』 및 『주민투표법』 등과 함께 상반기 중 일괄 통과 추진
- 주민소환 청구 대상자에 비례대표 지방의원 적용 및 도입방안 연구(~'21.12월)

□ 주민감사청구제도 활성화

-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및 조례 개정 지원
 -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및 지자체별 주민감사 청구 조례 개정 지원

3 2021년 추진 방안 및 일정

□ 주민소환제도 개선

① 주민소환 청구요건 및 개표요건 합리적 조정

- 청구요건 차등화 및 개표요건 완화 등 주민소환법 개정 추진(~'21.12월)
 - 국회 행안위 방문 설명 등 추진(상시) 및 개정안 필요성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국민 제도 활용 안내서 발간('21.6월)
 - ※ 주민소환법 13개 개정과제 마련('20.9월), 국회 제출('20.12월)

② 주민소환 청구 대상자에 비례대표 지방의원 확대 검토

- 비례대표 지방의원 주민소환 도입 방안 연구('21.9~12월)

③ 주민소환투표운동 및 서명 요청활동의 제한 규정 개선 검토

- 주민소환 서명 요청 활동 방식 확대를 위한 주민소환법 개정 추진(~'21.12월)
 - ※ 주민소환법 13개 개정과제 마련('20.9월), 국회 제출('20.12월)
- 전자서명 청구제도 도입을 위한 주민소환법 개정 추진(~'21.12월)
 - 자치입법플랫폼에 온라인 서명청구 기능 추가 탑재(~'21.12월)

□ 주민감사청구제도 활성화

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

- 청구인 대표자 증명, 서명요청 절차 등 준용 규정 정비
 - ※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(6월), 입법예고(7~8월), 개정 완료(11월)

② 지자체별 주민감사청구 조례 개정 지원

- 주민감사 청구인수, 청구연령 하향 관련 규정 개정 지원
 - 개정안을 반영한 지자체별 조례 개정 안내('21.6월)

< 2022년 >

□ 주민소환제도 개선

① 주민소환 청구요건 및 개표요건 합리적 조정

- 주민소환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등 하위규칙 등 개정('22.하반기)

② 주민소환 청구 대상자에 비례대표 지방의원 확대 검토

- 비례대표 지방의원 주민소환 방안 마련('22.하반기)

③ 주민소환투표운동 및 서명 요청활동의 제한 규정 개선 검토

- 주민소환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등 하위규칙 등 개정('22.하반기)

□ 주민감사청구제도 개선

-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 지속 모니터링

세부 추진과제	단위과제	'19년	'20년	'21년				'22년
				1/4	2/4	3/4	4/4	
1. 주민소환 제도 개선	① 주민소환 청구요건 및 개표요건 합리적 조정							
	② 주민소환 청구대상자에 비례대표 지방의원 확대 검토							
	③ 주민소환투표운동 및 서명요청활동의 제한 규정 개선 검토							
2. 주민감사청구 제도개선	① 주민감사 청구요건 합리적 조정							
	② 주민감사 청구연령 하향 검토							
	③ 감사청구 가능기간 연장							

(1-6) 주민투표 청구대상 확대

1 종합계획 주요내용

< 기본 방향 >

- 풀뿌리 주민자치 구현의 실질적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 제도 활성화

○ 주민투표 청구대상 확대 검토

- 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에 열거된 주민투표 제외대상인 자치단체의 재정·예산 관련 사항, 행정기구의 설치 및 공무원의 인사·정원 등

○ 모바일 기반 투표(M-Voting) 도입

- 온라인 청구방식 도입 및 청구인 서명부 서명 방법 개선 등 투표대상 확대 검토

○ 주민투표 개표 요건 완화

- 자치단체 인구 규모 등에 따라 개표 요건 합리적으로 조정

2 2021년 추진 목표

○ 주민투표제도 개선

- 주민투표 대상 확대, 온라인 서명청구 및 전자주민투표제도 도입, 개표요건 폐지 등 주민투표법 개정 추진(~'21.12월)

※ 기존 개정안('19.1월 국회 제출)에 대해 일부 보완 및 수정을 통해 17개 개정과제 마련 후 국회 제출('20.12.28.)

□ 주민투표 개선방안 마련

① 주민투표 청구대상 확대 검토

- 예산 관련 사무처리 등 주민투표 제외대상을 명확히 하고,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 사항에 대해 주민투표 청구가 가능하도록 주민투표법 개정 추진(~'21.12월)
- 국회 행안위 방문 설명 등 추진(상시) 및 개정안 필요성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국민 제도 활용 안내서 발간('21.6월)

② 온라인 청구방식 도입

- 온라인 서명청구제도 및 전자주민투표제도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법 개정 추진(~'21.12월)
- 자치입법플랫폼에 온라인 서명청구 기능 추가 탑재(~'21.12월)
- 중앙선관위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투표시스템(K-Voting system)를 활용하여 전자주민투표제도 시범실시(주민투표법 개정 이후)

③ 주민투표 개표요건 완화

- 개표요건 폐지 및 확정요건 완화(투표율 1/4 이상) 등 주민투표법 개정 추진('21.12월)

※ 기존 개정안('19.1월 국회 제출)을 보완하여 수정안 마련 및 국회 제출('20.12월)

< 2022년 >

□ 주민투표 개선방안 마련

① 주민투표 청구대상 확대 검토

-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 개정 지원('22.하반기)

② 온라인 청구방식 도입

-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른 중앙선관위 관리규칙 개정 지원('22.하반기)
및 제도운영 모니터링(계속)

③ 주민투표 개표요건 완화

-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른 제도 운영 모니터링(계속)

세부 추진과제	단위과제	'19년	'20년	'21년				'22년
				1/4	2/4	3/4	4/4	
1. 주민투표 개선방안 마련	① 주민투표 청구대상 확대 검토							
	② 온라인 청구방식 도입							
	③ 주민투표 개표요건 완화							

(1-7)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

1 종합계획 주요내용

< 기본 방향 >

- 주민참여 범위 확대 및 주민참여예산기구 구성 등 제도 활성화 추진

○ 주민참여예산기구 설치 확대

- 주민참여예산기구 근거 마련을 통한 주민참여기구 설치 확대

○ 주민참여 범위를 자치단체 “주요사업” 및 “예산 전 과정”으로 확대

- 비공모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 유도 및 예산 전 과정에 대한 참여의 제도적 기반 마련

○ 자치단체 유형별 주민참여 운영 모델 개발·확산

- 자치단체 특성 및 주민참여 여건 등을 고려, 주민자치회의 의견 반영 등 유형별 주민참여 운영 모델을 개발하여 단계적으로 참여 확산

※ 유형별 운영 실적을 바탕으로 우수 자치단체 선정, 재정 등 인센티브 부여

2 2021년 추진 목표

□ 주민참여예산기구 설치 확대* : 243개 [全 자치단체 완료]

○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다양한 주민참여예산기구 구성 확대·완료

- 지역 특성을 반영한 주민참여예산기구 구성·운영을 확대·완료하여, 全 자치단체의 예산과정에 실질적 주민참여 실현

※ '20년 234개 → '21년 243개(증 9개), 금년대비 주민참여 예산액(22년) 증액*

* 주민참여예산기구 확대에서 예산액을 증액하는 질적성장 필요

□ 주민참여운영 모델 개발·확산

- 지역 특색에 맞는 선도적 운영모델 개발·확산
 - 예산과정별 제도 운영 모델 발굴·개발 및 우수 자치단체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한 주민참여 범위 확대
- 지역별 주민참여예산 제도 운영 격차 축소
 - 맞춤형 컨설팅 및 평가를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모니터링을 통한 제도 운영 미비점 개선 및 발전방안 마련 지원
- 소통 및 홍보 강화
 - 실시간 정보 제공이 가능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 연계 추진 및 다양한 홍보콘텐츠로 홍보 강화

3 2021년 추진 방안 및 일정

□ 주민참여예산기구 설치 확대 : 243개 [全 자치단체 완료]

- 全 자치단체(243개)에 주민참여예산기구 구성 확대·완료(연중)
 -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주민참여예산기구 설치 확대 독려
- ※ '18년 214개 → '19년 224개(↑증 10) → '20년 234개(↑증 10) → '21년 243개(↑증 9)

□ 주민참여운영 모델 개발·확산

- 지역 특색에 맞는 선도적 운영모델 개발·확산
 - 예산과정별 제도 운영모델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('21.5~8월)
 - 우수사례 발굴·전파 및 우수 단체에 인센티브 지원('21.11~12월)
- ※ 전국적 파급·확산 효과가 큰 유형별 우수사례 선정, 발표대회 개최 등

○ 지역별 주민참여예산 제도운영 격차 축소

- 맞춤형 컨설팅 및 자치단체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, 모니터링을 통한 제도 운영 미비점 개선·보완('21.4~12월)

※ 관계기관과 협업으로 합동 컨설팅·설명회·워크숍 등 개최

○ 소통·홍보 강화

-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과 연계한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플랫폼 구성·설계(~'21.12월)
- 우수사례집 발간, 홍보물 제작 등 온·오프라인 홍보 강화(연중)

4 향후 추진 방안 및 일정

< 2022년 >

□ 주민참여운영 모델 개발·확산

-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실시('22.상반기)
- 지역 특성에 맞는 우수사례 발굴·확산 및 인센티브 지원('22.하반기)
-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 연계한 주민참여예산제도 온라인 플랫폼 구축('22년), 시범운영('23년), 시행('24년)

5 단위과제별 일정표

세부 추진과제	단위과제	'19년	'20년	'21년				'22년
				1/4	2/4	3/4	4/4	
1. 주민참여 예산 기구 설치 확대	① 주민참여예산기구 설치 확대							
2. 주민참여 범위 확대	① 주민참여 범위 확대 ('19년 완료)							
3. 주민참여 운영 모델 개발·확산	① 주민참여 운영 모델 개발·확산							

2.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

2-1. 중앙-자치단체 간 사무 재배분

2-2. 중앙권한의 기능 중심 포괄 이양

2-3. 자치분권 법령 사전협의제 도입

2-4.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

2-5. 대도시 특례 확대

2-6.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

**2-7. 교육자치 강화 및 지방자치와의 연계 · 협력
활성화**

(2-1) 중앙-자치단체 간 사무 재배분

1 종합계획 주요내용

< 기본 방향 >

-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국가-자치사무의 구분기준을 명확히 하고 중앙-지방 및 자치단체(광역-기초) 간 사무배분의 일관성·합리성 확보
-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(가칭) 법정수임사무 도입 등 검토

○ 국가-자치사무 배분 원칙 및 기준 명확화

- 현행법상 포괄적 구분 기준을 실제 사무배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환경·고용·복지 등 주요 분야별 예시를 통해 구체화
- 구체화된 기준은 지방이양 대상 기능 발굴·심의 및 제·개정 법령 사전협의 시 활용

○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이원화 추진

-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구분 기준에 따라 기관위임사무의 지방 이양 또는 국가 환원 추진
-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로 재배분이 어려운 기관위임사무는 (가칭) 법정수임사무 도입 등 검토

○ 광역·기초단체 간 사무배분 합리화

- 광역 기능 중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능은 기초로, 기초가 수행하기 어려운 광역·종합적 기능은 광역으로 합리적 재배분
- 인구과소화 등으로 기초가 처리하기 곤란한 사무는 광역으로 이관·위탁 처리하거나, 특별자치단체 등 자치단체 간 협력방식으로 처리

2

2021년 추진 목표

- 국가-자치사무 배분 원칙 및 기준 명확화
 - 자치단체 사무예시규정 정비를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
-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이원화 추진
 - 기관위임 사무를 대상으로 지방이양 필요 사무 발굴
 - 자치권 침해 법령 정비 추진
 - 사무구분체계 개편을 위한 (가칭)법정수임사무 도입 가능성 검토
- 광역·기초단체 간 사무배분 합리화
 - 시·도 및 시·군·구 간 이양이 필요한 기능 발굴·심의

3

2021년 추진 방안 및 일정

□ 국가-자치사무 배분 원칙 및 기준 명확화

- 자치단체 사무예시규정 정비를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
 -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예시규정 관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(제12조) 내용 반영(~'21.11월)

□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이원화 추진

- 『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방안 연구』('20.11월~'21.2월)로 도출된 기관 위임사무 등 이양 대상 사무의 이양 적합성 검토(~'21.5월)
- 국가-지방 사무수행체계 현황 자료의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(~'21.6월)
 - 『법령상 사무총조사』 연구용역의 사무목록('19.5월 기준) 현행화 및 지속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 정비 방안 마련
- 자치권 침해 법령 정비 추진(~'21.12월)
 -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하위법령이 조례 내용을 제한하는 현행 법령 전수조사(~10월 예정) 및 정비 추진(법제처 협업 추진) ※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제28조제2항 관련
- (가칭) 법정수임사무 도입 추진 검토(~'21.5월)

□ 광역·기초단체 간 사무배분 합리화

- 자치단체 수요조사 등을 통해 발굴한 사무 중 시군구가 수행하기에 적합한 사무에 대하여 이양 심의(~'21.12월)

4

향후 추진 방안 및 일정

<2022년>

□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이원화 추진

- 국가-지방자치단체 사무수행체계 현황 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 정비 추진('22.1월~)
- 자치권 침해 법령 정비 추진('22.1월~)

□ 광역·기초단체 간 사무배분 합리화

- 광역-기초단체 간 이양이 필요한 기능 발굴 및 심의

5

단위과제별 일정표

세부 추진과제	단위과제	'19년	'20년	'21년				'22년
				1/4	2/4	3/4	4/4	
1. 국가자치사무 배분 원칙 및 기준 명확화	① 국가-자치사무 배분 원칙 및 기준 명확화							
2.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이원화 추진	①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이원화 추진							
3. 광역기초단체 간 사무배분 합리화	① 광역기초단체 간 사무 배분 합리화							

(2-2) 중앙권한의 기능 중심 포괄 이양

1 종합계획 주요내용

< 기본 방향 >

- 기능 중심의 이양을 통한 자치단체의 실질적 권한 강화
- 자치단체별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지역 맞춤형 분권 실현

○ 중앙권한의 기능 중심 지방이양 추진

- 기존 단위사무 중심이 아닌 기능 중심의 포괄 이양 방식을 통해 지방의 실질적 권한 확대
- 규제완화, 주민생활 편의 증진 등 파급효과가 큰 기능* 중심의 지방이양을 통해 지역주민 체감도 제고

* 일자리 창출, 지역주민 복지 향상, 교통·환경 등 주민 생활환경 개선 등

○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방이양 추진

- 지역주민·시민단체, 중앙·지방공무원, 현장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해 지방이 요구하는 사무를 우선 발굴·이양
 - ※ 위원회 홈페이지에 이양신청코너 개설 및 신청 접수를 위한 권역별 정기간담회 개최
-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이양 추진

○ 『지방이양일괄법』 제정 추진

- 과거 지방이양 의결('00~'12) 후 장기간 미이양된 사무(518건)의 조속한 이양추진을 위해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추진
 - ※ 향후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의결되는 지방이양사무는 일괄 법제화 방식 추진

○ 지방이양 행·재정지원 제도화

- 지방이양으로 인한 자치단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방이양에 따른 행·재정방안 마련 및 제도화 추진
- 실질적인 재정지원 규모 산정을 위하여 (가칭)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 등 설치·운영 검토

2

2021년 추진 목표

- 중앙권한의 기능중심 지방이양 추진
 - 새로운 환경변화와 지역현안을 중심으로 기능별 이양사무 발굴
-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방이양 추진
 - 자치단체 수요조사, 현장간담회 등을 통한 다양한 이양사무 발굴 및 지역맞춤형 지방이양 추진
- 『지방일괄이양법』 제정 추진
 - 대도시 특례사무, '18년 이후 자치분권위원회 이양의결 확정 사무 등을 대상으로 제2차 『지방일괄이양법』 제정 추진
- 지방이양 행·재정지원 제도화
 - 지방이양사무의 유형별 비용추계모형 개발을 통한 비용추계방식 체계화
 - 중장기 이양비용 지원 관련 논의

3

2021년 추진 방안 및 일정

- 중앙권한의 기능 중심 지방이양 추진
 -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재난 대응, 지역균형뉴딜,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특정 분야 및 현안 중심의 이양사무 발굴 및 심의(상시)
 -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자치권 제한 법령 개선 추진
 -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부처의 승인, 사전협의, 보고, 통보, 제출, 사무기준 제시 등으로 자치사무의 재량권을 침해하는 법령의 정비

□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방이양 추진

- 지역경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 수요조사 등을 통한 이양과제 발굴 및 심의(상시)
- 지역주민, 시민단체, 지역 산업 및 업종별 이해관계자, 현장 전문가, 시·도연구원 등과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 개최(연중)
- 해외 지역맞춤형 권한 이양 제도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특별자치 단체가 수행하기 적합한 이양사무 발굴 및 이관 방안 검토(~'21.7월)
- (가칭) 자치분권 특구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('21.상반기) 및 제도화 방안 마련('21.하반기)

□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추진

- 대도시 특례사무, '18년 이후 자치분권위원회 이양의결 확정 사무 등을 대상으로 제2차 『지방일괄이양법』 제정 추진
 - 제2차 『지방일괄이양법』 제정안 마련 및 자치분권위원회 본회의 심의·의결(~'21.9월), 국회제출(~'21.12월)

□ 지방이양 행·재정지원 제도화

- 제2차 『지방일괄이양법』 제정 전 이양비용평가 추진
 - 지방이양사무 비용추계모형 검토 및 연구용역 추진(~'21.7월)
 - 제2차 『지방일괄이양법』 제정안에 포함된 지방이양사무에 대한 인력·재정 규모 산정('21.7~9월)
- 자치단체 자율성이 보장되는 이양비용 이전방안 논의 등(~'21.12월)

〈2022년〉

□ 중앙권한의 기능 중심 지방이양 추진

- 지방의 실질적인 권한 확대를 위한 기능 중심의 이양사무 발굴 및 심의(계속)

□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방이양 추진

- 수요자 중심의 현장성과 효과성이 높은 이양사무 발굴 및 심의(계속)

□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추진

- 제2차 『지방일괄이양법』 제정을 위한 국회대응('22.1월~)
- 제2차 『지방일괄이양법』 제정·시행을 위한 행정안전부-지방4대 협의체 등 관계기관 간 협력 강화('22.상반기)

□ 지방이양 행·재정지원 제도화

-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에 따른 이양사무 비용 정산('22.3월)
- 중장기 이양비용 이전방안 제도화 추진('22년~)

세부 추진과제	단위과제	'19년	'20년	'21년				'22년
				1/4	2/4	3/4	4/4	
1. 중앙권한의 기능 중심 지방이양 추진	① 중앙권한의 기능 중심 지방이양 추진							
2.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방이양 추진	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방이양 추진							
3.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추진	①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추진							
4. 이양사무에 대한 인력·재정 병행 이전 제도화	① 이양사무에 대한 인력·재정 병행이전 제도화							

(2-3) 자치분권 법령 사전협의제 도입

1 종합계획 주요내용

< 기본 방향 >

- 모든 제·개정 법령에 대한 사무배분 적정성 사전 심사로 자치권 보장
- 사전 검토 제도화를 통해 사무배분 구속력 확보

○ 자치단체와 관련된 제·개정 법령 사전심사 확대

- 제·개정 법령안의 사무배분, 국가 관여의 적정성, 자치권 침해여부 등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 및 사후 모니터링 강화

분 야	주요 검토사항
사무배분의 합리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무구분의 명확성 • 국가-시·도-시·군·구 사무배분원칙 준수 여부 • 사무위임 시 위임의 타당성 여부 등
국가 관여의 적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도·감독의 필요성, 관여 최소화 원칙 준수 여부 • 사무성격(국가·지방·위임사무)별 적절한 지도감독 규정 여부
기타 자치권한 침해 여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자치조직) 개별법에서 행정기구, 위원회 등 신설 여부 • (자주재정) 사무신설·변경·위임에 따른 자원 지원방안 • (자치입법) 조례 규정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규정했는지 여부

○ 사전협의 제도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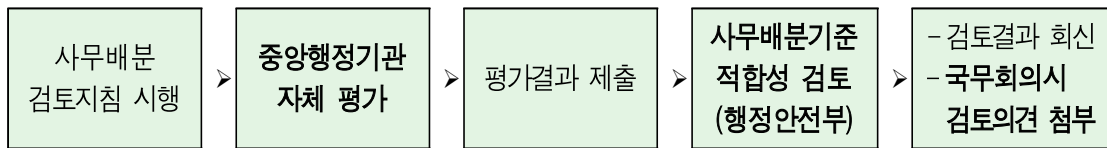
- 법령 제·개정시 입법예고 전까지 사무배분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 평가를 실시하도록 자치분권 사전협의 의무화

※ 유사사례 : 규제영향분석,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분석평가, 통계기반정책평가

- 사전협의 의견을 국무회의 시 첨부하도록 하여 구속력 부여

<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>

- ▶ (협의대상) 중앙행정기관장이 발의한 모든 제·개정 법령
- ▶ (협의절차) 각 부처에서는 법령 제·개정시 입법예고 전까지 (가칭)사무배분 검토지침에 따라 자치분권 사전평가 실시
 - 행정안전부에서는 사전평가 결과에 대해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법제처 심사 전까지 담당 기관에 통보
 -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·개정 법령안에 최종 검토결과 반영



- ▶ (의견수렴) 사전협의 과정에 자치단체·지방4대협의체·전문가 의견 수렴 제도화
 - 자치단체의 검토의견을 직접 반영하기 위한 의견조회 시스템 구축 추진
 - ※ 시스템 구축 전까지 주요 제·개정 법령에 대해 공문을 통해 의견수렴 실시
 - 지방재정·조직·인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일괄 검토
 - 전문성 보강*을 위한 사무배분 자문단 구성·운영
 - * ① 지방 재정·조직·입법권 등 다수 사항과 관련되어 복합적·심층적 심사가 필요한 경우, ② 심사결과 및 조치권고에 이의가 있는 경우, ③ 제정 또는 전부개정 법령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경우 등

2

2021년 추진 목표

-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성과 공유 및 교육 강화
 - 사전협의 종합보고서 발간(상반기)으로 지방자치권 보장 성과 확산 및 사전협의제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(하반기)
- 자치분권 사전협의 과정에서 의견수렴 내실화
 - 자치단체에 사전협의 결과* 제공(반기별)으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의견제출 기반 마련 및 사전협의 자문단 운영 정례화(반기별)
 - * 사전협의 검토의견의 제·개정 법령안 반영 여부 등

□ 자치단체와 관련된 제·개정 법령 사전심사 확대

○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운영 및 부처 이행상황 점검·관리

- 중앙행정기관 소관 제·개정 법령안의 사무배분 적정성 및 지방 자치권 침해 여부 사전 검토 및 개선방안 지속 제시(연중)
- 사전협의 개선의견(보충의견·개선권고)에 따른 부처 이행률 제고를 위한 제·개정 법령안 반영 여부 모니터링('21.6월, 12월)

○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성과 공유 및 교육 강화

- 사전협의 주요 검토의견 사례 및 우수 입법례 소개 등 지방자치권 보장 성과 확산을 위한 종합보고서 발간(~'21.6월)
- 중앙·지방 담당자 대상 국가·지방간 합리적 사무배분의 중요성 교육 등을 위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(~'21.10월)

○ 자치분권 사전협의 과정에서 의견수렴 내실화

- 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사전협의 검토의견의 제·개정 법령안 반영 여부 등 제공('21.6월, 12월)
- 사전협의 검토기준, 제도 운영 자문 등을 위한 사전협의 자문단 운영 정례화(반기별)

〈2022년〉

□ 자치단체와 관련된 제·개정 법령 사전심사 확대

- 중앙행정기관 소관 제·개정 법령안의 사무배분의 적정성 및 지방 자치권 침해 여부 사전 검토, 개선방안 제시(상시)
- 사전협의 주요 검토의견 반영 및 검토기준 등을 위한 『자치분권 사전협의 지침』 개정('22.7월)

세부 추진과제	단위과제	'19년	'20년	'21년				'22년
				1/4	2/4	3/4	4/4	
1. 자치단체와 관련된 제·개정 법령 사전심사 확대	① 자치단체와 관련된 제·개정 법령 사전심사 확대							
2. 사전협의 제도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	① 사전협의 제도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('19년 완료)							

(2-4)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

1 종합계획 주요내용

< 기본 방향 >

- 광역자치단체 수요 중심의 점진적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이양 추진
- 자치단체-특별지방행정기관 간의 분야·지역별 협의회 운영으로 연계·협력 강화

○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추진

-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에 대한 이관 수요 조사를 통해 선도사업 추진, 성공사례 도출 후 전국 확산
 - ※ 중복수행 사무, 집행적 사무, 지역적 사무 대상 우선 이양 검토
-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사례 등 분석을 기초로 전국 확대 추진
-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통한 특별지방행정기관 권한이양 방안 검토

○ 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 간의 협업 제도화

- 소관 사무에 대해 상호 논의, 협력·조정할 수 있는 지역단위 협의회 운영
- 교육, 안전, 복지, 환경 등 분과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별 여건과 행정수요에 맞게 자율적 운영
- 지역단위협의회와 분과별협의회의 연계·협력을 통해 효율성 제고
 - ※ 「중앙행정기관·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규정(대통령령)」에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구성 범위, 기능, 운영방식 등 세부사항은 조례에 위임

2

2021년 추진 목표

-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과 연계한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이양
 -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광역자치단체 수요 중심의 기능 발굴
- 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 간의 협업 제도화 방안 마련

3

2021년 추진 방안 및 일정

□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추진

-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현황 분석 및 타 시·도 적용가능 이양 사무 발굴*(~'21.7월)
 - *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방안 연구용역('20.11.~'21.2.)
-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사무 심의 및 이양 추진(~'21.12월)
 - 자치단체 협의체를 통한 기 발굴* 및 추가 이양사무 수요
 - * (기 발굴) 환경 등 4개 분야 39개 사무
-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중 특별지방자치단체 수행이 적합한 사무 유형 및 위임대상 사무를 발굴하여 이관방안 검토(~'21.12월)
 - 특별지방자치단체로 국가사무 위임방안 모색 등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(~'21.7월)

□ 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간의 협업 제도화

- 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간의 자율적인 협업 사례 발굴·확산
 - 기관 간 협의회 운영 등 협업사례* 소개자료 발간 및 지자체 공유
 - * 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간의 협업 실태 연구('20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)

4

향후 추진 방안 및 일정

< 2022년 >

□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추진

-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통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시범 실시('22년~)
- 광역자치단체 수요 중심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이양 심의

□ 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간의 협업 제도화

- 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간의 자율적 협업 우수사례 발굴·공유 및 확산

5

단위과제별 일정표

세부 추진과제	단위과제	'19년	'20년	'21년				'22년
				1/4	2/4	3/4	4/4	
1. 특별지방행정 기관 정비 추진	①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추진							
2. 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 기관 간의 협업 제도화	① 자치단체와 특별지방 행정기관 간의 협업 제도화							

(2-5) 대도시 특례 확대

1 종합계획 주요내용

< 기본 방향 >

- 대도시 행·재정 특례 확대를 통한 주민생활 편익 증진

○ 대도시 특례 확대

- 인구 50만 및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수한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재정·사무 등 다양한 분야의 특례 지속적 발굴, 지역별 수요가 높은 사무 우선 발굴·이양
- 기 발굴된 대도시 사무 특례* 법제화 지속 추진

* (구)지방자치발전위원회 및 (구)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부여한 189건 (100만 대도시 39건, 50만 대도시 150건) 중 162건(대도시특례 19건·시군구 이양 8건 법제화 완료)

2 2021년 추진 목표

- 주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대도시특례 사무 발굴·심의
- 실행력 담보를 위한 대도시특례 입법 추진상황 점검·관리
-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특례 대상 시·군·구 지정기준 마련

□ 대도시 특례 확대

① 대도시 특례 추가 발굴

- 50만 이상 대도시별 현장간담회 등을 통한 지역 맞춤형 사무특례 발굴
 - 50만 이상 대도시 서면 수요조사 및 검토(~'21.4월)
 -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 사무 자체 발굴 및 검토(~'21.3월)
 - 50만·100만 이상 대도시, 도, 관계부처 건의 및 의견수렴을 통한 교통·건축·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사무특례 발굴 및 심의·확정·통보(연중)

② 대도시 특례 법제화 추진 점검

- 기 부여된 대도시 특례 입법 추진상황 점검·관리·독려
-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대상 대도시특례 사무 검토
-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추진
 -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마련을 위한 실무작업단 구성·운영
 -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(안) 수립(~'21.6월)
 - 본위원회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심의·의결(~'21.9월)

③ 특례 대상 시·군·구 지정기준 마련

- 『지방자치법』 상 3가지 고려요소*에 따라 특례부여가 가능한 시·군·구 지정기준을 마련하고, 지정기준과 연계한 특례부여 범위 연구(시군구 추가 특례제도 정책방향 연구, '21. 상반기) 추진

* ①실질적인 행정수요, ②국가균형발전, ③지방소멸위기

-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시행령 개정안 마련(~'21년)

< 2022년 >

□ 대도시 특례 확대

① 대도시 특례 사무 추가 발굴 지속 추진

- 현장간담회, 수요조사 등을 통한 특례 적극 발굴 및 심의·확정·통보

② 대도시 특례 법제화 추진 점검 및 독려

- 법제화 추진상황 점검·관리 및 독려
-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추진

③ 특례대상 시·군·구 제도 운영

- 마련된 기준·절차에 따라 특례 대상 시·군·구 지정 추진

세부 추진과제	단위과제	'19년	'20년	'21년				'22년
				1/4	2/4	3/4	4/4	
1. 대도시 특례 확대	① 대도시특례 추가 발굴							
	② 대도시 특례 법제화 추진 점검							
	③ 대도시 행정적 명칭 부여							

(2-6)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

1 종합계획 주요내용

< 기본 방향 >

- 중앙집권적 경찰권의 민주적 제도화 및 정치적 중립 강화
-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강화
- ※ 단, 주민안전을 위한 치안력 약화 및 치안불균형 방지, 신규 재정투입 등 국민 부담 최소화, 급격한 도입에 따른 혼란 최소화를 고려, 단계적 추진

- (도입단위) 자치단체 권한과 책임하에 생활안전·교통·지역경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* 도입
 - * 시·군·구의 치안수요를 민주적으로 수렴하는 체제 포함
- (사무배분) 국가경찰은 전국적 치안 수요에 대응, 자치경찰은 지역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찰사무의 적정 배분 추진
 - ※ 국가-자치경찰 간 업무협력을 위한 연계·협업체제 구축 등 검토
- (추진방식) 지방자치, 경찰행정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를 운영, 자치경찰제의 조직·인사·재정 등 주요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한 합리적인 도입방안 마련
- (단계적 추진) 시범운영을 거친 후 수정·보완을 통해 단계적으로 전국 확대 추진, 시행 초기 정책 혼선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 및 원활한 시행을 도모

2

2021년 추진 목표

-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경찰청 소관 행정규칙 정비(개정·폐지) 및 시·도 '표준 조례안' 마련('21.상반기)
 - 자치경찰법안 및 하위법령 구체화를 통한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경찰청 소관 행정규칙을 정비하고, 지자체 조례 제정 지원
-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을 통한 제도 운영방안 개선·보완('21.상반기)
 -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 및 사무기구 조직 설계 등 실무 준비가 완료된 시·도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운영 실시
- 자치경찰제 대내·외 공감대 형성(연중)
 -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및 전면 시행 과정에서 현장 경찰관 등 대내 의견을 지속 수렴·반영하고, 국민이 제도 운영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 적극 홍보

3

2021년 추진 방안 및 일정

□ 자치경찰제 법제화 및 대내·외 공감대 형성

① 행정규칙 정비 및 시·도 '표준 조례안' 마련('21.상반기)

- 자치경찰제 도입 내용에 맞춰 경찰청 소관 규칙·훈령 등 정비(개정·폐지) 추진('21.상반기)

※ 「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, 「교통사고조사규칙」, 「과학수사 기본규칙」, 「범죄수사규칙」 등 총 93개 행정규칙 일괄 개정·폐지

- 개정 「경찰법」 등 자치경찰제 관련 법령에서 각 시·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주요 규정사항*에 대해, 행안부·지자체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‘표준 조례안’ 마련(’21.상반기)

※ △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 △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임명 및 운영 세부사항 △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

- ‘표준 조례안’ 마련시 시·도 대상 설명회 개최 및 배포 추진

②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을 통한 제도 운영방안 개선·보완(’21.상반기)

- (개요) 시·도경찰청장 -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가 협의하여 준비를 완료한 시·도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운영 돌입, 단, ’21.6.30 종료

< 「경찰법」 개정안 中 시범운영 특례 >

- ▶ **부칙 제3조**(자치경찰사무 수행에 관한 시범운영 특례) ① 시·도경찰청장과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는 협의하여 이 법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관하여 시범운영을 실시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필요한 시범운영은 2021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필요한 시범운영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(대상) 전국 17개 시·도
- (운영) 조직·사무·인사·예산 등 세부 운영방안 수립 내용에 따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가정하여 시범운영 실시

- ▶ **(조직)** 시·도경찰청 자치경찰부(차장) 및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(사무기구) 운영
※ 지방경찰청 명칭은 ’21.1.1. 우선 변경(지방경찰청 → 시·도경찰청)
- ▶ **(사무)**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,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 지휘·감독 실시
- ▶ **(인사)**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은 시·도지사,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, 시·도청장이 위임받은 범위에 맞게 행사
- ▶ **(예산)** ’21년 경찰청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비를 별도 사업으로 재편성, 시·도에 이체하여 집행

- (점검) 시범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미비사항은 신속하게 보완하고, 우수성과는 적극 홍보하는 등 제도의 완성도 제고

③ 자치경찰제 대내·외 공감대 형성(연중)

- 시범운영 기간 자치경찰자문단 구성·운영(案)(~'21.6月)
 - (대상) 전국 시·도경찰청별 생안·여청·교통 등 현장 직원
 - (운영) 코로나19 방역지침 변경 전까지는 비대면 회의로 진행*하고, 그 후에는 정기·수시 회의 및 간담회 등 개최
 - * 화상회의 또는 내부망(폴넷) 교육포털 '현장학습모임' 등 활용
 - (기대효과) 대내·외 정책 수용성 향상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소통창구로 활용,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사무 수행방안 및 매뉴얼 마련 등 안정적 제도 정착 도모
- 자치경찰 종합 홍보방안 마련·추진(연중)
 - 전국 시·도경찰청의 자치경찰 운영성과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고, 공유·확산할 수 있는 종합 홍보방안 마련·추진

4

향후 추진 방안 및 일정

< 2022년 >

□ 자치경찰제 법제화 및 대내·외 공감대 형성

① 자치경찰제 법제화

- 자치경찰제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등 지속 점검·보완(연중)

② 자치경찰제 운영방안 개선·보완

- 자치경찰제 운영현황 점검 및 우수사례 발굴·확산(연중)

③ 자치경찰제 대내·외 공감대 형성

- 현장 경찰관 및 지자체·지역주민 등 대내·외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, 자치경찰제 운영성과를 적극 홍보(연중)

세부 추진과제	단위과제	'19년	'20년	'21년				'22년
				1/4	2/4	3/4	4/4	
1. 자치경찰제 법제화 및 대내·외 공감대 형성	① 경찰법 개정 등 법제화							
	② 자치경찰제도 운영방안 마련							
	③ 대내·외 공감대 형성							

(2-7) 교육자치 강화 및 지방자치와의 연계·협력 활성화

1 종합계획 주요내용

< 기본 방향 >

- 유·초·중등교육을 시·도 교육청 및 학교로 단계적 이양
-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·협력 활성화로 주민에 대한 교육서비스의 질 향상

《 유·초·중등교육 권한의 이양 》

- 교육부 - 교육청 - 학교 간 유·초·중등교육 권한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법령정비 및 단계적 이양

※ 교육부·교육감협의회 공동, 유·초·중등교육 이양협의체 구성(교육자치정책협의회, '17. 8)

- 규제적 지침 정비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교육청·학교로 권한을 재배분하고, 국가는 국가 책무성이 요구되는 최소 범위의 역할 수행*

* ①국가 교육표준, ②미래교육 전략·방향, ③교육격차 해소, ④안전, 갈등관리 등

《 교육자치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 》

- 지방교육기관과 지역사회와의 협력 등 주민참여 확대방안 마련

《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·협력 활성화 》

- 교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는 협력방안 마련

- 자치단체-교육기관 공동 교육지원센터 설치, 마을교육 네트워크 형성,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등

- 지방교육기관과 자치단체의 연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

- 인사교류,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 사전협의 절차 도입 등

□ 유·초·중등교육 권한의 이양

- 시·도교육청과 학교의 권한과 책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이양 사무 추가 발굴·점검 및 법령 정비(~'21.12.)

□ 교육자치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

-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학교 운영에 대한 학교구성원, 지역주민 등의 참여 확대 방안 마련(~'21.12.)

※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입법 지원, 학교자치 워킹그룹 운영 등

□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·협력 활성화

- '21년 미래교육지구 성장지원단 구축·운영을 통한 지속가능한 협력 체제 구축 지원(~'21.12.)
 - (마을교육 의사결정) 주민자치회 내 마을교육자치분과 설치 또는 민관학 마을교육자치회 활성화 등 마을교육 의사결정구조 안착 지원(행안부 협조)
 - (협력센터) 교육(지원)청-지자체 협력체제 구축·운영을 위해 교육협력 센터를 구축하고 학교-마을을 연계하는 플랫폼 역할 수행 지원
- 온종일돌봄 확대를 위한 지자체·교육청·학교 연계·협력 강화
 - (협력돌봄) 지자체·교육청·학교가 협력하여 초등돌봄을 제공하는 새로운 협력돌봄 모델 추진(복지부-교육부 협업, '21~'22)
 - (돌봄수요조사) 범정부 온종일돌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돌봄기관별 희망 수요 및 만족도 등을 조사하여 지자체와 교육청이 지역특성에 맞는 초등돌봄서비스 제공 지원

□ 유·초·중등교육 권한의 이양

① 유·초·중등교육 권한의 이양

○ 이양 과제에 대한 이행상황 분기별 점검(~'21.12.)

※ 1~3차 우선정비과제(131개) 중 미이행 과제 9건 지속·점검

○ 이양 사무 추가 발굴(~'21.12.)

- 시·도교육청과 학교의 요구, 정책연구 분석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양사무 발굴 및 배분 추진

□ 교육자치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

① 교육자치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

○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입법 지원(~'21.12. 국회통과 추진)

- 교육감의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 근거 마련

※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국회 제출('20.12.30.)

○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학교 운영에 대한 학교구성원, 지역주민 등의 참여 확대 방안 마련(~'21.12.)

※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입법 지원, 학교자치 워킹그룹 운영 등

○ 학교자치 워킹그룹* 운영 지원을 통한 학교자치 확산과 제도 개선 지원(~'21.12.)

* 워킹그룹: 학교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주체들이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,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목표로 자발적으로 구성된 집단

□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 · 협력 활성화

① 교육협력 거버넌스 구축

- 미래교육지구* 선정·운영을 통해 교육자원을 통합·관리하는 협력 체제 구축·지원과 주제별 컨설팅 등 성장 지원 추진(~'21.12.)

* 미래교육지구 : 교육(지원)청과 지자체의 지속가능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,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지역 중심의 교육사업 연계·지원('20년 11개 → '21년 22개)

- 지구 선정 연차에 따라 성장기록 중심 전문가 2인(신규지구), 집중 컨설팅 중심 전문가 3인(연속지구)으로 총 56명의 성장지원단 구성('21.3.)
- '21년 22개 선정지구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(주제별 특강, 우수사례 공유 등) 및 워크숍 개최, 지구별 특성에 맞는 컨설팅 등 성장지원 추진(~'21.10.)
- 지구별 성장지원 현황, 성장분석 및 컨설팅 내용 중심 성장분석 보고서 제작(~'21.12.)

- 교육(지원)청-자치단체 공동협력센터 설립, 지역자원 활용방안 등

- 공동협력센터 및 마을교육자치회 구축 지원(~'21.12.), 우수사례 공유 등

○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

- 중앙-지방 간 상시적인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『공동실무 추진협의회』 운영(반기별 1회 이상)
- 온종일돌봄 확대의 일환으로 학교가 공간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돌봄을 운영하는 지자체-학교 협력돌봄*(학교돌봄터 사업) 추진('21.~'22.)

* 지자체가 초등학교의 공간을 활용해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돌봄 수요를 반영한 돌봄서비스 제공, 돌봄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·지자체·교육청이 함께 지원

※ (사업 규모) '21년~'22년 2년간 매년 750실(총 1,500실, 돌봄 3만명 확대)

- 지역 특성에 맞는 초등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돌봄 필요 여부 등에 대한 '21년도 범정부 초등돌봄 수요조사*' 실시('21.10.)
 - * 전국 초등학교(6,000여개) 재학생 1~5학년 학부모 및 유치원(8,800여개)·어린이집(38,000여개)에 재원중인 만5세 예비취학아동 학부모대상 조사 추진
 - ※ 수요조사 시 학부모의 돌봄 필요 여부, 필요시간, 희망하는 돌봄서비스 유형, 온종일돌봄서비스 인지도 및 도움이 되었는지 만족도 등을 반영하여 지자체, 교육청, 학교에서 차년도 돌봄목표 수립 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
- 지자체·교육청 온종일돌봄 담당자 업무 연수 실시 등 온종일돌봄 체계 협력 강화(~'21.12.)

4

향후 추진 방안 및 일정

< 2022년 >

□ 유·초·중등교육 권한의 이양

① 유·초·중등교육 권한의 이양

- 이양 사무 점검 및 법령 정비(~'22년)

□ 교육자치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

① 교육자치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

- 학교자치 워킹그룹 확산 및 교육자치 역량 강화 추진(~'22년)

□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·협력 활성화

① 교육협력 거버넌스 구축

- 성장지원단 구축·운영을 통한 지역교육 협력체제 구축 지원
 - 심화모델 개발 및 우수사례 확산을 통한 일반화 추진(~'22년)

- 온종일돌봄 확대를 위한 『공동실무추진협의회』 지속 운영(반기별, ~'22년)
- 지자체-교육청-학교 협력돌봄(학교돌봄터 사업) 추진을 통하여 다양한 형태의 협력돌봄 모델 개발·지원(~'22년)

5

단위과제별 일정표

세부 추진과제	단위과제	'19년	'20년	'21년				'22년
				1/4	2/4	3/4	4/4	
< 행정안전부 >								
1.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·협력 활성화	① 지방교육기관과 자치단체 연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							
	② 시도 및 교육청간 인사 교류 관련 지침 개정							
< 교육부 >								
1. 유·초·중등 교육 권한의 이양	① 유·초·중등교육 권한의 이양							
2. 교육자치에 대한 주민 참여 확대	① 교육자치에 대한 주민 참여 확대							
3.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·협력 활성화	① 교육협력 거버넌스 구축							

3.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

3-1. 국세 · 지방세 구조 개선

3-2. 지방세입 확충 기반 강화

3-3.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

3-4. 국고보조사업 개편

3-5. 지방교부세 형평 기능 강화

(3-1) 국세·지방세 구조 개선

1 종합계획 주요내용

< 기본 방향 >

- 8: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:3을 거쳐 6:4로 개편
 - 세수의 신장성과 안정성이 높고, 지역의 경제활동이 지방세수로 연계될 수 있는 소비·소득과세 중심의 지방세 확대
- (지방소비세) 현행 부가가치세의 11%인 지방소비세 비중 확대 추진
 - 지방소비세 배분지표의 합리화 검토
 - (지방소득세) 현행 국세(소득세·법인세) 세율의 10% 수준인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추진
 - (기타 세목) 지방세에 적합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검토
 - (균형장치) 지방세 확대 시 특정지역의 세수 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 균형장치 등 마련
 - ※ 지방소비세 세수 배분 시 지역별 가중치 적용, 자치구를 고려한 균형장치 마련 검토 등

2 2021년 추진 목표

-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등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
 -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위한 2단계 재정분권 추진
 - 국세-지방세 비중 합리적 조정, 지방재정 확충 및 지방 자율성 제고
- 기타 세목 조정
 - '2단계 재정분권' 논의를 통해 지역기반이 강한 추가적인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

□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등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

○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위한 2단계 재정분권 추진

- 관계기관 간 쟁점 조정 및 자치단체 협의 완료(~'21.4월)

※ 『2단계 재정분권 TF』 대안을 토대로 핵심 쟁점 조정 중(국조실 주관, '20.12월~)

- 2단계 재정분권 방안 및 자치단체 간 재원 배분방안 마련(~'21.6월)

- 관계법률 개정안 마련 및 입법 추진(~'21.12월)

※ 법률 개정 추진시 '22년도 예산안에도 관련 내용 반영 필요

□ 기타 세목 조정

○ '2단계 재정분권' 논의를 통해 지역기반이 강한 추가적인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

< 2022년 >

□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등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

○ 2단계 재정분권 관련 제도 시행('22년~)

- 세부 절차 규율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(법률개정 후 즉시 추진)

□ 기타 세목 조정

○ '2단계 재정분권' 논의를 통해 지역기반이 강한 추가적인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

세부 추진과제	단위과제	'19년	'20년	'21년				'22년
				1/4	2/4	3/4	4/4	
1. 지방소비세 비중 확대	① 지방소비세 비중 확대 추진('19년 완료)							
	② 지방소비세 배분지표의 합리화 검토('19년 완료)							
2.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	①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추진							
3. 기타 세목 조정	①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검토							
4. 재정 균형 장치 마련	① 특정지역 세수집중 완화 위한 재정 균형장치 마련('19년 완료)							

(3-2) 지방세입 확충 기반 강화

1 종합계획 주요내용

< 기본 방향 >

- 지방세 신세원 발굴, 지방세제 및 세정의 합리적 개선, 지방세 비과세·감면을 관리,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등을 통한 지방세입 확충기반 강화

○ 외부불경제, 과세형평성 등을 감안한 지방세 신세원 발굴

- 현행 과세대상과 유사한 대상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 추진

현재 과세 중	현재 미과세 중
지하자원('92.), 지하수('92.), 수력발전('92.), 원자력발전('06.), 화력발전('14.) 등	해저자원, 천연가스 생산, 석유 정제 시설, 시멘트 생산시설, 사용 후 핵연료 등

- 취득세·레저세 등에 대한 신규 과세대상 발굴

○ 지방세제 및 세정의 합리적 개선

- ※ (예시) 자치단체별 특성을 고려한 세목조정 검토, 차세대 지방세·세외수입 시스템 구축, 납세자 보호관제도 활성화 등

○ 지방세 비과세·감면을 15% 수준 관리

- 전문기관에 의한 감면 사전·사후평가* 강화, 일몰도래 합리적 재설계 등

* 100억원 이상 신규 감면 예비타당성 평가 내실화 및 감면 사후 심층평가 도입

○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및 부과요율 등 합리화를 통한 지방세외수입 확충

□ 지방세 신세원 발굴

- 외부불경제 유발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또는 신규 과세 관련 연구·논의 지속
 - ※ (세율인상) 화력발전, (신규과세) 시멘트, 방사성폐기물 등

□ 지방세제 및 세정 합리적 개선

- 자치단체 간 재정 형평성 강화를 위한 세목 조정방안 지속 논의
- 신기술을 적용한 클라우드 기반의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구축 추진

□ 지방세 비과세·감면율 15% 수준 관리

- 조세전문기관을 통한 감면 사전·사후평가* 실시, 일몰도래 감면의 합리적 재설계 등으로 지방세 비과세·감면율 관리
 - * 100억원 이상 신규 감면 대상 예비타당성 및 일몰도래 감면 사후 심층평가 실시('21.3.~10.)

□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

- 세외수입 납부편의 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 등 개별 시스템을 통합·연계하는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

□ 지방세 신세원 발굴

-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 추진, 지역자원시설세 등 신규 과세 대상 발굴
 -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자치단체 의견수렴('21.5월~)
 - 주요 과세대상 관련 관계부처 협의 지속(~'21.12월)
 - 『지방세법』 개정안 국회 논의 대응(~'21.12월)

□ 지방세제 및 세정 합리적 개선

① 자치단체별 세목 조정

- 자치단체 의견 수렴 및 전문가 논의 등 지속(연중 상시)

②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(계속)

-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2단계 사업자 선정 및 계약(~'21.2월)
- 세무행정 업무서비스 구현, 대민서비스 설계·구현,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등('21.1.~)

□ 지방세 부과세·감면을 15% 수준 관리

- 지방세 지출 기본계획 수립·부처 통보, 수요조사(~'21.3월)
- 조세전문기관 예타·심층평가, 부처의견수렴·감면통합심사('21.3~7월)
 - 신규·일몰도래 감면 등에 대한 조세전문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·심층평가를 통한 지방세 지출 성과관리 시행
- 감면목적에 부합하는 세목 선택 및 다각화된 감면방식을 통해 감면 합리적 재설계,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 반영(~'21.12월)
 - 감면 정비안 및 법 개정안 마련('21.9월), 입법 완료('21.12월)

□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

-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2단계 구축 사업 추진
 - 구축 2단계 사업자 선정('21.1.) 및 착수보고회 개최('21.2.)
 - 세외수입업무시스템·대민서비스 개발,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등('21.1.~)

< 2022년 >

□ 지방세 신세원 발굴

- ①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 추진, 지역자원시설세 등 신규 과세대상 발굴
 - 관계부처·자치단체 및 이해관계인 논의 지속(~'22년)

□ 지방세제 및 세정 합리적 개선

- ① 자치단체별 세목 조정
 - 대안 설계 및 자치단체 간 이견 조율(~'22년)
- ②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2단계 사업 추진(계속)
 - 세무행정, 대민서비스, 클라우드 인프라 등 구현 및 테스트(~'22년), 시스템 개통('23.1월)

□ 지방세 비과세·감면율 15% 수준 관리

- 지방세 비과세·감면율 15% 수준 관리
 -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마련 및 입법추진

□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

-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2단계 사업 추진(계속)
 - 세외수입행정·대민서비스 개발·테스트(~'22년) 및 개통('23년)

세부 추진과제	단위과제	'19년	'20년	'21년				'22년
				1/4	2/4	3/4	4/4	
1. 지방세 신세원 발굴	①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 추진, 지역자원 시설세 등 신규 과세 대상 발굴							
2. 지방세제 및 세정 합리적 개선	① 지방세발전위원회 구성·운영							
	② 자치단체별 세목 조정							
	③ 납세자보호관 제도 강화('19년 완료)							
	④ 차세대 지방세정보 시스템 구축							
3. 지방세 비과세 감면율 15% 수준 관리	① 지방세 비과세·감면율 15% 수준 관리							
4.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	①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('19년 완료)							
	②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							
	③ 표준수수료 부과요율 등 합리화('20년 완료)							

(3-3)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

1 종합계획 주요내용

< 기본 방향 >

- 기부지역, 기부금 등 기부자 선택권이 존중되는, 조세방식이 아닌 기부방식으로 설계하되, 자치단체에 기부가 가능하도록 별도 법률로 제정
- 개인이 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기부금의 일부에 대해 세액공제 등 혜택 부여
 - 고향 기부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답례품 제공을 허용하되, 과열경쟁 방지를 위해 종류 및 상한선 규정
- 기부금 모집 및 활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
 - 별도 계정 마련, 모집액·지출실적 등 공표, 기부금 사용분야* 규정 등
 - *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·보호,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
- 기부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 구축
 - 기부관련 정보 제공 및 원스톱서비스 지원으로 기부자 편의 증진

2 2021년 추진 목표

-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 추진
- 고향사랑 기부금법 시행령 제정 추진
- 고향사랑 기부금법 관련 지자체 조례 제정 지원
- 고향사랑 기부금법 공무원 교육
- 고향사랑 기부제도 대국민 홍보

□ 기부금 세액공제 등 혜택 부여 방안

○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 추진('21.12월限)

※ '20.9월 행안위에서 의결된 고향사랑 기부금법안의 법사위 심의 대응 및 조속 통과 추진

○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('21.12월限)

※ 세액공제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既 발의('20.6.3.) / 고향사랑 기부금법의 연계법안으로서 법 통과 후 심의 예정

※ 세액공제에 대해서 정부측(행안부, 기재부 등)은 협의 완료

□ 기부금 모집 및 활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

○ 고향사랑 기부금법상 투명성 확보 규정 마련(既 완료)

- 별도 기금 설치, 모집액·지출실적 등 결과 공표, 기부금 사용분야 제한 등 법제화*

* 행안위 의결안, 기금 설치·사용분야 제한(§10), 결과 공개(§12) 등 규정 既 포함

○ 고향사랑 기부금법 시행령 제정('21.12월)(시행령안 마련 既 완료)

- 기부금 모집 방법 규정, 결과 공표 방법·주기 명시, 기부금 사용 제한분야 구체화, 답례품 등 모집활동 소요비용의 기금 충당 등

○ 고향사랑 기부금법 관련 지자체 조례 제정 지원(법 통과 후 즉시)

- 기부금 사용분야 및 기금을 통한 관리를 위해 관련 조례 제정

○ 고향사랑 기부금법 공무원 교육(법 통과 후 즉시)

○ 고향사랑 기부제도 대국민 홍보(법 통과 후 즉시)

□ 기부제 운영지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

○ 기부금 접수 등 관련 금융기관의 협업방안 마련('21.하반기)

< 2022년 >

□ 기부금 세액공제 등 혜택부여 방안

-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 조사·분석·연구('22.상반기)

□ 기부금 모집 및 활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

- 고향기부금 제도 시행 및 운영 관련 자치단체 공무원 교육('22.상·하반기)
- 고향사랑 기부제도 대국민 홍보(연중)

□ 기부제 운영지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

- 고향사랑 기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('22.상반기)
- 고향사랑 기부 종합정보시스템 테스트('22.하반기)
- 고향사랑 기부 종합정보시스템 운영('22.하반기)

세부 추진과제	단위과제	'19년	'20년	'21년				'22년
				1/4	2/4	3/4	4/4	
1. 기부금 세액 공제 등 혜택 부여 방안	① 기부금 도입 및 세액 공제 등 혜택부여 방안							
2. 기부금 모집 및 활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	① 기부금 모집 및 활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							
3. 기부제 운영 지원 종합 정보시스템 구축	① 기부제 운영지원 종합 정보시스템 구축							

(3-4) 국고보조사업 개편

1 종합계획 주요내용

< 기본 방향 >

- 지방재정 부담 완화 및 자율성 확대를 위한 국고보조사업 개편 추진
 - (국가책임 강화) 국가-지방 간 기능 재조정과 연계하여 국민최저 수준(National Minimum) 보장적 복지사업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추진
 - (지방사업화) 지역 현장여건에 따라 수행될 필요가 있는 지역밀착형·지역특화사업 등은 지방으로 이양 추진
 - (원칙·기준) 기준보조율 체계를 개선하고, 지방 부담을 합리화하여 지방이 책임있게 사업운영을 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체계 수립
- ※ 지방부담을 수반하는 사업은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사전심의 강화

2 2021년 추진 목표

- (국가책임 강화 추진) '제2단계 재정분권'과 연계하여 복지사업에 대한 국가-지방 부담체계 등 검토
- (지방사업화 추진) 지역밀착형 사무 등의 지방이양을 통한 지방의 자율성 제고
- (원칙기준 수립) 중·장기적 국고보조율 체계 정비, 부정수급자 국고 보조사업 배제 및 보조금 관리제도 정비를 통한 성과관리체계 구축
- (지방재정부담 사전심의 강화) 자치단체 소통창구 마련, 광역-기초간 대응지방비 분담에 관한 판단기준 마련 등을 통해 심의 내실화

□ 국가책임 강화 추진

- 주요 복지사업 국고보조율, 국세-지방세 구조, 재정제도 개편 등을 종합 고려하여 방안 검토 (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과 연계 논의 지속)

□ 지방사업화 추진

-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지역밀착형 기능 등의 지방이양 검토 (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과 연계 논의 지속)

□ 원칙 기준 수립

① 기준보조율 체계 개선 및 지방부담 합리화

- 분야별 대응지방비 추계 등을 통한 지방비 부담 파악 및 지방부담 수준 적정 관리
- 중·장기적으로 국고보조율 체계 정비 등 지속 추진

② 성과관리체계 수립

- 보조사업 관리 강화 방안 마련
 - 보조사업자의 내부거래 차단 등 보조금관리의 투명성 확대를 위해 수의계약에 대한 관리 강화
 - ※ 보조사업자 등이 일정금액 이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앙관서장 또는 상위보조사업자에게 보고하도록 통합관리지침을 개정(~'21.12월)
 - 보조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정유형 및 사업 계획서 등 보조사업자 관련 정보 사전 공개
 - ※ 사전 정보공개 대상확정 및 관련내용의 통합관리지침 개정(~'21.12월)

-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제도 및 평가체계 개선 추진
 - 국고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를 더욱 엄격하게 추진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재정운용 활용 강화

※ 보조금연장평가 완료(~'21.5월) 및 평가결과 반영하여 예산편성('21.8월)

③ 지방재정부담 사전심의 강화

- 중앙지방협력회의*와 연계하는 등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 자치단체 역할 강화 방안 마련(~'21.12월)
 - * 『지방자치법』('20.12.9. 국회 본회의 가결) 근거마련, 「중앙지방협력회의법률」('20.9.10. 행안위 계류중)
-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의 광역-기초단체 간 적정 분담비율에 관한 합리적 판단기준 마련(~'21.12월)
-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마련(~'21.12월)

4

향후 추진 방안 및 일정

< 2022년 >

□ 원칙 기준 수립

① 기준보조율 체계 개선 및 지방부담 합리화

- 세부화되어 있는 국고보조율 체계 정비 등 추진(~'22년/지속)

② 성과관리체계 수립

- 국고보조사업 성과관리 강화 방안 검토(~'22년)

③ 지방재정부담 사전심의 강화

-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마련(~'22년)

세부 추진과제	단위과제	'19년	'20년	'21년				'22년
				1/4	2/4	3/4	4/4	
1. 국가책임 강화 추진	① 국가적 사업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추진							
2. 지방사업화 추진	① 지역특화사업 등 지방이양 추진							
3. 원칙기준 수립	① 기준보조율 체계 개선 및 지방부담 합리화							
	② 성과관리체계 수립							
	③ 지방재정부담 사전심의 강화							

(3-5) 지방교부세 형평 기능 강화

1 종합계획 주요내용

< 기본 방향 >

-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완화 및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교부세의 형평기능 강화
 - (교부세율 상향 등)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 등 균형발전 재원으로서 교부세 역할 강화
 - (제도개선) 자치단체 세입확충 자구노력 유인* 및 산정방식 합리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
- * 탄력세율 적용, 감면 축소 등 자체노력 항목을 개선하여 세입확충 인센티브 강화 검토

2 2021년 추진 목표

- (균형기능 강화) 지방교부세를 통한 자치단체 간 재정형평성 제고 및 지방재정 확충 역할 강화
- (산정방식 개선) 산정항목·체계 등 지방교부세 운영의 합리성 및 투명성 제고

3 2021년 추진 방안 및 일정

-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 등 균형발전 재원으로서의 역할 강화
 - (추진 내용)
 - 자치단체별 재정여건에 따른 형평적 배분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의 지방교부세 혁신 방안 마련
 -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 등 추진

○ (일정)

- 지방교부세 형평기능 강화 등 혁신방안 마련·발표(~'21.6월)
- 지방교부세 혁신 관련 자치단체·전문가 설명회·토론회(~'21.9월)
- 법정률 상향 등을 포함하여 2단계 재정분권 방안 마련 논의(지속)

□ **세입확충 자구노력 유인 및 산정방식 합리화 등 제도개선 추진**

○ (추진 내용)

- 재난안전 관련 항목 확대 등 지자체 현안 대응 지원 강화
- 현행 산정항목 전체 재검토 및 통·폐합 등 개편 검토
- 지방세입 확대 등 자체 노력 반영 강화 등 인센티브 체계 개선

○ (일정)

- 제도개선 관련 『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』 개정안 마련(~'21.9월)
- 입법예고(~'21.11월), 법제처 심사 및 개정 완료(~'21.12월)
- 개정 시행규칙 시행('22.1월~)

4

향후 추진 방안 및 일정

< 2022년 >

□ **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 등 균형발전 재원으로서의 역할 강화**

- 지방교부세의 지자체 형평성 제고 기능 강화('22년~)

□ **세입확충 자구노력 유인 및 산정방식 합리화 등 제도개선 추진**

-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등 제도개선('22년~)

세부 추진과제	단위과제	'19년	'20년	'21년				'22년
				1/4	2/4	3/4	4/4	
1. 지방교부세율 상향	①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 등 균형발전 재원으로서의 역할 강화							
2. 제도개선 추진	① 세입확충 자구노력 유인 등 제도개선 추진							

4. 중앙-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

4-1. 중앙-지방 협력기구 설치·운영

4-2. 자치단체 간 협력 활성화 지원

4-3. 제주·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

(4-1) 중앙-지방 협력기구 설치·운영

1 종합계획 주요내용

< 기본 방향 >

- 중앙-자치단체 간 실질적인 소통과 협력이 정립될 수 있도록 협력기구 구성 및 운영방안 마련, 설치 법제화
- 중앙-지방 협력기구 설치근거 마련
 -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협력 및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'중앙-지방협력회의' 설치 근거 마련(지방자치법 등)
- 중앙-지방 협력기구 설치·운영
 - (구성) 대통령(의장), 국무총리, 관계부처 장관, 자치단체 등
 - ※ 자치단체 및 관계부처 구성범위는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
 - (기능) 주요 논의사항
 - 국가와 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
 - 국가와 자치단체의 역할·재원 분담
 - 지방자치제도 및 지방재정·세제에 관한 사항
 -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사항 등

2 2021년 추진 목표

- 『중앙지방협력회의법』 제정 추진
 - 『지방자치법』 개정과 연계하여 『중앙지방협력회의법』 제정('21.6월 국회 통과 추진)
 - * 『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』 제정안 국회제출('20.7.3.)
- 중앙-지방 소통과 협력을 위한 회의 운영
 - 법령 제·개정 전까지 시·도지사간담회 및 중앙·지방정책협의회 운영

□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 추진

- 『지방자치법』 전부 개정안 국회 통과('20.12.9.)에 따라 『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』 제정안 국회 통과 추진(~'21.6월)
- 국회 통과 시 협력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제정 추진(연내 제정 완료)

□ 중앙-지방 소통과 협력을 위한 회의 운영

- 『중앙지방협력회의법』 및 시행령 제정 前
 - 대통령 주재 시·도지사간담회 추진(연중, 수시)
 - 중앙·지방정책협의회* 운영(연중, 수시)
 - * 중앙부처 및 시·도 부단체장과 국정현안 공유 및 논의 등
- 『중앙지방협력회의법』 및 시행령 제정 後
 - 중앙지방협력회의 및 실무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
 - 중앙·지방정책협의회 운영(연중, 수시)

< 2022년 >

□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·운영

- 중앙·지방협력회의 및 실무협의회 등 구성·운영('22.1월~)
- 중앙·지방정책협의회 운영(연중, 수시)

세부 추진과제	단위과제	'19년	'20년	'21년				'22년
				1/4	2/4	3/4	4/4	
1. 설치근거 마련	① 지방자치법 개정 ('20년 완료)							
	②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							
2. 설치·운영	① 시·도지사간담회 및 중앙·지방정책협의회 운영(법 제·개정 前)							
	② 중앙·지방협력회의의 구성·운영(법 제·개정 後)							

(4-2) 자치단체 간 협력 활성화 지원

1 종합계획 주요내용

< 기본 방향 >

- 자치단체 간 다양한 방식의 협력으로 권역별 공동발전 기반마련 및 활성화
- 주민생활 관련 기능의 효율화 및 행정서비스의 지속가능성 확보

《 새로운 협력제도 마련 》

- (특별지방자치단체)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초월한 권역 내의 단일 또는 복합적 사무를, 광역계획 등의 수립에 의하여 종합적·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도입
 - ※ 규약에 따라 장과 의회를 직접 또는 간접선거로 선출하는 등 구성의 민주성과 운영의 독립성 확보
- (협약제도) 국가 간의 조약과 같이 다수의 자치단체가 협약을 체결하여, 별도의 법인이나 조직 설치 없이 사무처리와 정책면에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새로운 협력제도 도입
- (자치단체 간 기관·시설의 공동 활용) 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만들어지는 규약으로 기관·시설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 검토
- (현행 협력제도 개선) 이와 함께 행정협의회, 사무위탁, 조합 등 현행 협력제도의 목적, 절차, 근거규정 보완 등 개선

《 협력제도 활성화를 위한 행·재정적 지원 》

- **(협력 분야)** 광역적 행정사무 처리범위 확대 및 새로운 형태의 협력사업 추진방안 마련
 - 토지이용, 광역 대중교통망 구축, 쓰레기 처리, 동물원·컨벤션 센터 운영, 빈집 등 지역자원 공동관리 등 광역적 수행이 바람직한 분야 확대
 - 자치단체별 농수산물의 생산, 가공, 유통 등 농상공 연계프로그램 등 자치단체 간 기능적 협력사업 추진방안 제시
- **(표준안 마련)** 협력제도 기본지침, 협약 절차, 표준 규약, 특별지방 자치단체의 경우, 중앙 및 시·도 권한의 이양 요구권 부여 등 제시
 - 특히 인구감소지역 등에서는 기구 및 시설의 공동 활용방안 및 사무·정책면에서의 역할분담 기준 등 마련, 행정권고
 - ※ 지방자치법 개정 또는 개별법 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등 법제화 추진
- **(분쟁해결)** 협약 및 규약 미이행 등 자치단체 간 분쟁 발생시 자체분쟁조정 등 도입
 - ※ 자체분쟁조정 거쳐, 미해결 시 시·도 및 중앙분쟁조정위 부의
- **(정보공개)** 자치단체 간 협약 및 규약내용은 지방의회 의결 및 주민에게 공지·홍보
- **(재정지원)** 협력사업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재정지원 근거·방안 마련
 - ※ (일본) 연계협약을 통해 연계중추도시권을 형성하는 경우 특별교부세, 지역활성화사업채 발행, 외부인재 활용 지원비 등 다양한 지원

2

2021년 추진 목표

-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도입을 지원함으로써 광역적 처리가 필요하거나 효율적인 사무에 대한 지자체 간 연계·협력 강화
- 지자체 간 협력 과정에서 체결하는 협약등에 효력을 부여하는 협약제도 도입 검토를 통해 기존 협력제도의 한계 극복 노력
- 기관·시설의 공동설치 관련 해외사례 및 국내 도입방안 마련을 통해 지자체 인력·예산 등 규모의 경제 효과 달성 도모
- 행·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으로 자치단체 간 협력 활성화 제고

3

2021년 추진 방안 및 일정

①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 추진

- 특별자치단체 제도 공론화 추진(~'21.6월)
 - ※ 동남권, 충청권 간담회 완료('21.1.13.)
- 도입 분야 발굴 및 지자체 대상 컨설팅 제공(~'21.12)
 - 권역별 간담회, 매뉴얼 발간, 설치 수요조사, 운영모델 개발 등

② 자치단체 간 협약제도 도입

- 협약제도 도입 관련 지자체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 및 공론화 추진(~'21.12)
 - ※ 지자체 대상 의견 청취, 전문가 간담회 등
- 자치단체 간 협약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검토(~'21.12.)

③ 자치단체 간 기관·시설의 공동설치 검토

- 기관 등의 공동설치 제도 관련 의견수렴 및 공론화(~'21.12월)

※ 지자체 대상 의견 청취, 전문가 간담회 등

④ 협력제도 활성화 위한 행·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

- 협력제도 활성화를 위한 행·재정적 지원방안 마련(~'21.12월)

*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관련 인센티브 지원 방안 등

4

향후 추진 방안 및 일정

< 2022년 >

①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 추진

- 특별지방자치단체 수요 발굴 및 컨설팅을 통해 '22년부터 특별 지방자치단체 설치·운영

② 자치단체 간 새로운 협력제도의 제도화

- 협력제도, 기관 등 공동설치 제도 등 도입방안 검토를 통해 필요 시 법 개정 등 추진

③ 협력제도 활성화 위한 행·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

- 지원사업 성과평가 및 확산 방안 마련(~'22.12월)

세부 추진과제	단위과제	'19년	'20년	'21년				'22년
				1/4	2/4	3/4	4/4	
1. 새로운 협력제도 마련	①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도입							
	② 자치단체 간 협약제도 도입							
	③ 자치단체 간 기관시설의 공동활용 검토							
	④ 행정협의회 제도 개선 추진('20년 완료)							
	⑤ 지방자치단체조합 제도 개선 추진('20년 완료)							
	⑥ 행·재정적 지원 근거 및 방안 마련							

(4-3) 제주·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

1 종합계획 주요내용

< 기본 방향 >

- 포괄적 사무배분(이양)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자기결정권 강화 및 맞춤형 주민자치 고도화 등 자치분권 모델 정립
-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특성·행정수요 등 지역 여건을 고려, 핵심 분권 과제 중심으로 시범실시 추진

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

○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고도의 자치권 보장

- 지역주민의 삶과 밀접한 환경·투자·관광·교통·문화·산업·복지·미래 성장동력 분야 사무 등
 - ※ 경제·산업 분야의 창의적 정책수행을 위한 포괄적 자율권, 청정환경 보존을 위한 환경보안관 제도 도입, 해외 우수인재 유치에 위한 비자 개선 등
- 자치, 조세, 재정, 금융 분야 등 분권과제 발굴 및 법적 특례 부여
 - ※ 자치경찰제 확대 시범 운영, 국세 이양 및 자율성 부여, 면세·과세·기금 특례 확대 등 실질적인 재정·세제 관련 권한 이양

○ 도민의 자기결정·책임성 강화 및 직접민주주의 활성화

- 지방정부형태, 계층구조, 선거제도 등에 대한 자기결정권 부여
- 자기통제, 책임성 강화를 위해 도의회 기능 및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
- 마을·읍면동 자치 등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, 직접민주주의 활성화로 '주민 중심의 분권모델' 완성

○ 제주특별법 위임조례 확대로 자치입법권 강화

-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에 대하여 자치입법권 보장
 - * 다만,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사항 등 중요사항은 제주특별법에서 규정

세종특별자치시 맞춤형 자치모델 구축

- 시민주도·시민참여가 일상화되는 『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』 추진
 - 마을조직·마을입법·마을재정·마을계획·마을경제 등 5대 권한을 읍·면·동 단위로 나누고 지원하는 체계 구축
- 단층제 구조 등 지역여건을 반영한 세종형 자치경찰제 시범 도입
 - 여성·아동의 치안수요 급증, 중앙행정기관 중심 도시 등을 고려, 광역단위 자치경찰 조직 구축
- 세종시의 특성과 자치역량 및 지역수요에 맞는 맞춤형 권한 이양
 - 도시 조성에 필요한 권한이양 등 세종형 행정특례 우선 발굴
 - 권한이양 시 행·재정 지원 병행 의무 명시
- 세종형 자치조직운영 자율성 확대
 - 단층제에 맞는 본청-읍면동 기능 재설계 및 하부행정기관 기구·인력운용 모델 설계, 자치조직권 특례 부여

2 2021년 추진 목표

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

국무조정실

- 중앙행정권한 이양·특례 등을 통해 높은 수준의 지방분권 및 제주형 자치모델의 완성을 위해, 단계적 제도개선(제주특별법 개정) 추진
 - 7단계 제도개선안 제주지원위 의결, 입법절차 추진(~'21. 12월)
 - ※ 제주특별자치도 및 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, 지역상생 발전 등을 위한 제주형 재정기반 확충, 청정환경의 체계적 보전과 관리 강화 등 추진

행정안전부

- 제주특별법(6단계 제도개선)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* 이행(~'21.12월)
 - * 제주특별법 위임조례 제·개정
- 7단계 제도개선안 정부 제출에 따른 입법절차 추진 등
 - * 7단계 제도개선안 제주도의회 제출('19.10.) → 도의회 동의('20.7.) → 정부 제출('20.7.)
 - ※ 7단계 제도개선 내용 : 주민조례 발안 연령 완화 및 외국인 주민투표권 확대 등 직접민주주의 강화, 감사위원회의 독립성·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, 제주형 주민자치제도 발굴 및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강화
- 제주형 자치경찰제 완성도 제고(~'21.12월)

세종특별자치시 맞춤형 자치모델 구축

- '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' 기본계획* 추진 지원(~'21.12월)
 - * 주민자치회 전지역 확대 운영(14개→20개), 신설동 개청시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확대 시행, 읍면동별 주민세율 조정권 부여 등
- 「경찰법」, 「경찰공무원법」 등 개정에 따른 자치경찰제 운영 지원(~'21.6월)
- 세종시의 특성과 자치역량 및 지역수요에 맞는 맞춤형 권한 이양 방안* 추진(~'21.12월)
 - * 세종시 설치 목적에 자치분권 실현 명시, 주민세 균등분 세율조정 특례 등
- 단층제에 맞는 본청-읍면동 기능 재설계 및 하부행정기관 기구·인력 운용 모델* 검토(~'21.12월)
 - * 현재 책임읍면동 실시 중인 아름동, 조치원읍 운영실태 조사

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

국무조정실

□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고도의 자치권 보장

① 지역주민의 삶과 밀접한 환경·투자·관광·교통·문화·산업·복지·미래성장동력 분야 사무 등 이양

○ 7단계 제도개선안 제주지원위원회 심의 및 입법 추진(~'21. 12월)

- 제주지원위원회 심의 후 규제심사 등 입법절차 신속 추진

○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

- 제주특별자치도 '20년도 성과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의 제주시도정 환류를 위한 성과평가결과 활용계획 마련*

* ('20년도 성과평가) 성과평가 실시(2~6월), 평가결과 제주지원위 보고(9월), 성과평가결과 활용계획 제주지원위 심의(12월)

- 제주특별자치도 '21년도 성과평가 시행계획 수립 및 과제 추진*

* ('21년도 시행계획) 성과평가 시행계획 제주지원위 심의(2월), 과제 추진(1~12월)

※ 성과평가 결과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, 차년도 성과평가 시행계획 및 제주시도정에 반영

② 자치, 조세, 재정, 금융 분야 등 분권과제 발굴 및 법적 특례 부여

○ 자치, 조세, 재정, 금융 분야 제도개선과제를 제주특별법 개정안(7단계)에 반영하여 추진(~'21. 12월)

- 지역농어촌진흥기금 등 자체 재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

□ 도민의 자기결정·책임성 강화 및 직접민주주의 활성화

① 지방정부 형태, 계층 구조, 선거제도 등에 대한 자기결정권 부여

- 7단계 제도개선안 정부제출에 따른 제주특별법 개정(~'21.12월, 국회 통과)

* 행정시장 명의 민간위탁 허용 등

② 도의회 기능 및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

- 7단계 제도개선안 정부제출에 따른 제주특별법 개정(~'21.12월, 국회 통과)

* 도의회 인사권 보장, 감사위원·위원장 공모제 도입 등

③ '주민 중심의 분권 모델' 완성

- 7단계 제도개선안 정부제출에 따른 제주특별법 개정(~'21.12월, 국회 통과)

*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마련 등

④ 제주형 자치경찰제 완성도 제고

- 자치경찰 특화사무 고도화 및 치안·행정 융합사무 지속적 추진(~'21.12월)

- 국가경찰과의 중복사무를 최소화하고 특사경·관광경찰·교통안전
시설 업무 등의 자치경찰 특화사무 고도화 추진

※ 1월 정기 인사 시 해당 기능 강화를 위한 인사 반영

- 치안·행정 융합사무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임시직제 형태로 운영
되던 TF팀(교통민원팀·어린이통학로 안전팀)의 정식직제 반영 노력

※ 3월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 신설 관련 조례 개정 시 반영 추진

- 국가경찰과의 협의를 통한 국가경찰 정원의 신속한 이체 추진
 -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 후 사무분담 및 인력이체 협의(~'21.6월)
 - ※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4월, '21년 상반기 내로 정원 이체규모 결정 예상
 - 국가경찰 정원 이체 규모 결정 후, 행안부·기재부 협의를 거쳐 『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』 개정 완료(~'21.12월)

□ 제주특별법 위임조례 확대로 자치입법권 강화

① 제주특별법 위임조례 확대로 자치입법권 강화

- 제주특별법(6단계 제도개선)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* 이행(~'21.12월)
 - * 제주특별법 위임조례 제·개정

세종특별자치시 맞춤형 자치모델 구축

① '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' 추진

- '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' 기본계획 추진 지원
 - 주민자치회 전 읍면동 확대 및 제도 개선 지원(~'21.12월)
 - ※ 주민자치회 전지역 확대 운영(14개 → 20개), 신설동 개청시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확대 시행 등
 - 읍면동 주민세율 조정권* 부여를 위한 제도개선** 추진(~'21.12월)
 - * 주민자치회 총회 등을 통해 주민이 읍면동 환원 주민세율 직접 결정
 - ** 세종시법 개정안('20.6월 강준현 의원 대표 발의)

② 자치경찰제 운영 지원

- 『경찰법』, 『경찰공무원법』 등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경찰 운영 지원(~'21.6월)
 - 자치경찰제 관련 표준조례안 마련(~'21.1월), 세종시 자치경찰 준비단 지원(~'21.6월)

③ 맞춤형 권한 이양

- 세종시 맞춤형 권한 이양 사무 발굴(~'21.12월)
 - 세종시의 성공적 완성을 위한 이양 사무·행정특례 발굴 추진
 - ※ 이양사무 발굴(세종시) 후 이양 필요성 검토(행안부) 추진

④ 자치조직 운영 자율성 확대

- 단층제 등 세종시 특성을 고려한 본청-읍면동 기능 재설계 방안 마련*(~'21.12월)
 - 현재 책임읍면동 실시 중인 아름동, 조치원읍 운영실태 조사
- 『세종시법*』 연내 국회 통과 추진(~'21.12월)
 - * 세종시법 개정안(21대 국회 상정 / '20.6월 강준현 의원 대표 발의)
 - 세종시법 개정안 관련 국회 방문 설명 및 국회 논의 시 적극 대응

4

향후 추진 방안 및 일정

< 2022년 >

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

국무조정실

□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고도의 자치권 보장

- ① 지역주민의 삶과 밀접한 환경·투자·관광·교통·문화·산업·복지·미래성장동력 분야 사무 등 이양
 - 제주특별법 단계별 제도개선 추진(계속)
 -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 계획 수립 및 성과평가 실시, 평가결과의 제주시도정 환류를 위한 성과평가결과 활용계획 마련(매년)

- ② 자치, 조세, 재정, 금융 분야 등 분권과제 발굴 및 법적 특례 부여
 - 조세·재정의 자율성 및 자주도 제고를 위한 과제 발굴, 입법화(계속)

행정안전부

□ 도민의 자기결정·책임성 강화 및 직접민주주의 활성화

- ① 지방정부 형태, 계층 구조, 선거제도 등에 대한 자기결정권 부여
 - 기관구성 다양화 구현(~'22년)
- ② 도의회 기능 및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
 -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법(7단계 제도개선) 개정 후속조치 진행(~'22년)
- ③ '주민 중심의 분권 모델' 완성
 - 주민자치회 실시 등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법(7단계 제도개선) 개정 후속조치 진행(~'22년)
- ④ 제주형 자치경찰제 완성도 제고
 - 자치경찰 특화사무의 고도화 및 치안·행정 융합사무의 지속적 추진
 - '22년도 예산에 자치경찰 조직진단 및 사무추진 방향 재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비용 반영, 특화사무의 지속적인 발전 도모
 - 치안·행정 융합사무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임시직제 형태로 운영되던 TF팀(교통민원팀·어린이통학로안전팀) 정식직제 반영 노력
 - ※ '21년 행정복합치안센터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확대 운영 검토 등 치안·융합 사무의 확대 및 신규 업무 발굴

- 국가경찰과의 협의를 통한 국가경찰 정원의 신속한 이체 추진
 - 『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』 개정 시, 국가경찰 정원 이체를 위한 국가경찰 대상 특별 채용 등 후속 조치 추진
- ※ '22년 상반기 내 정원 이체 완료, 국가경찰에서 지방직으로 신분 전환을 원하는 대상자가 충족되지 않을 시 자체 신규 인력 채용으로 대처

□ 제주특별법 위임조례 확대로 자치입법권 강화

- ① 제주특별법 위임조례 확대로 자치입법권 강화
 - 제주특별법(6단계, 7단계 제도개선)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진행

세종특별자치시 맞춤형 자치모델 구축

- ① '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' 추진
 - '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' 기본계획 추진 지원(~'22년)
- ② 자치경찰제 운영 지원
 - 자치경찰제 운영 지원(~'22년)
- ③ 맞춤형 권한 이양
 - 세종시 특성을 고려한 이양 사무 발굴(~'22년)
- ④ 자치조직 운영 자율성 확대
 - 세종시 특성을 고려한 자치조직 운영 방안 모색(~'22년)

5

단위과제별 일정표

세부 추진과제	단위과제	'19년	'20년	'21년				'22년
				1/4	2/4	3/4	4/4	
< 국무조정실 >								
1. 포괄적 권한 이양으로 고도의 자치권 보장	① 지역주민의 삶과 밀접한 환경·투자·관광· 교통·문화·산업·복지· 미래성장동력 분야 사무 등 이양							
	② 자치, 조세, 재정, 금융 분야 등 분권과제 발굴 및 법적 특례 부여							
< 행정안전부 >								
■ 제 주								
2. 도민의 자기 결정·책임성 강화 및 직접민주주의 활성화	① 지방정부 형태, 계층 구조, 선거제도 등에 대한 자기결정권 부여							
	② 도의회 기능 및 감사 위원회 독립성 강화							
	③ '주민 중심의 분권모델' 완성							
	④ 제주형 자치경찰제 완성도 제고							
3. 제주특별법 위임조례 확대로 자치입법권 강화	① 제주특별법 위임조례 확대로 자치입법권 강화							
■ 세 종								
4. 세종특별 자치시 맞춤형 자치모델 구축	① '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' 추진							
	② 세종형 자치경찰제 시범 도입							
	③ 맞춤형 권한 이양							
	④ 자치조직 운영 자율성 확대							

5.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

5-1.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의정활동정보 공개

5-2. 자치조직권 강화 및 책임성 확보

5-3. 지방인사제도 자율성 및 투명성 확보

5-4. 지방공무원 전문성 강화

5-5.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 제고

5-6. 지방재정정보 공개 및 접근성 확대

5-7. 자치분권형 평가체계 구축

5-8. 자치단체 형태 다양화

(5-1)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의정활동정보 공개

1 종합계획 주요내용

< 기본 방향 >

- 지방의회제도 개선으로 의정활동 및 집행부 견제 기능 강화
 - 지방의회운영의 투명성 강화로 주민 신뢰 제고
-
- (자치입법권 강화) 조례제정 범위를 ‘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’로 확대 추진하고, 의회 운영 관련 자율성 확대
 - (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) 지방의회 사무처의 인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인사권 독립방안 마련
 - (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)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추진
 - (의정활동 정보공개) 윤리심사특위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의무 및 의견 존중, 의정활동 정보* 공시제도 도입
- * 현재 『지방의회 회의규칙』 등에 의해 지방의회가 자율 공개하고 있으나, 자치단체별로 공개항목이 상이함. 따라서 주민이 알고 싶어 하는 정보사항을 추가하여 비교 가능하게 추진

2 2021년 추진 목표

- 『지방자치법』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통한 성공적인 제도 정착 기반 마련
 - 지방의회 인사권, 정책지원 전문인력 등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 (조례, 회의규칙 등) 개정 지원
- 지방의회 투명성, 책임성 확보를 통한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긍정적 인식 제고
 - 윤리심사위원회, 의정활동 정보공개 등에 대한 표준안 마련, 가이드라인 제공 등

□ 자치입법권 강화

① 의회 운영 관련 자율성 강화

- 법률에 상세하게 규정된 지방의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삭제, 조례로 위임하여 의회 운영 자율성 제고
 - *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여비 제외, 정례회·임시회 운영 사항, 의안 발의 정족수 등을 조례에 위임, 특별위원회 구성요건 완화
-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개정계획 수립('21.6월) 및 공포·시행('22.1월)
 - * 개정계획 수립(6월), 입법예고(7~8월), 법제처 심사(9월), 국무회의(10월)
- 각 지방의회 조례 개정 가이드라인 마련 및 안내(~'21.10월)

□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

① 인사권 독립방안 마련

-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이었던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
 - 지방의회 인사권 운영방안 초안 마련('21.2월) 및 의견수렴('21.4월)
 -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개정계획 수립('21.6월) 및 공포·시행('22.1월)
 - * 개정계획 수립(6월), 입법예고(7~8월), 법제처 심사(9월), 국무회의(10월)
 -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『지방공무원법』 및 『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』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추진(~'21.12월)
 - 독립되는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채용 시험 집행기관 위탁, 의회간 또는 집행부-의회간 인사교류 모델 개발 등 지원(~'21.10월)

□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

① 의정활동 지원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

- 입법, 예산 등 지방의회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의원정수 1/2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의 법적 근거 마련
 - 지방의회 정책역량을 뒷받침할 우수한 '정책지원 전문인력' 충원을 위해 직무범위·직급·자격요건·배치방안 등 초안 마련('21.2월)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('21.4월)
 -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개정계획 수립('21.6월) 및 공포·시행('22.1월)
 - * 개정계획 수립(6월), 입법예고(7~8월), 법제처 심사(9월), 국무회의(10월)
 -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담당관 워크숍 등 교육 지원(~'21.12월)

□ 의정활동 정보공개

①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설치

- 윤리특위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징계 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청취(준중의무)
 -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사항에 회의규칙 표준안 등 가이드라인 수립(~'21.10월)

② 의정활동 정보공개제도 도입

- 지방의회 의정활동 등 일반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·방법 등에 관한 일반규정 신설
 - 지방의회 정보공개 대상 정보 발굴(~'21.6월) 및 공개의무 안내('21.12월)
 - 지방의원 의정활동 관련 정보공개 부분적 시행(~'21.12월)
 - * 의정비 결정 현황 등 정보공개가 가능한 사항을 행안부 홈페이지에 공개
 - 지방의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지방의회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('21.12월)

< 2022년 >

□ 자치입법권 강화

① 의회 운영 관련 자율성 강화

- 조례 위임 사항에 대하여 조례 개정 점검 및 개정 권고(상반기)
- 정례회·임시회 운영 현황, 특별위원회 구성현황 등 의회 운영 현황 파악(하반기)

□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

① 인사권 독립방안 마련

- 의회 인사권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추가 제도 개선사항 검토(상반기)
- 지방의회 인사위원회 구성 등 인사 운영 현황 조사(하반기)

□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

① 의정활동 지원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

- 관련 인력 채용 현황 조사 및 추가 제도 개선사항 검토(상반기)
-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에 대한 정책 모니터링, 도입효과 분석(하반기)

□ 의정활동 정보공개

①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설치

-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점검(상반기), 우수사례 발굴·전파를 통한 의회 자정 노력 촉구(하반기)

② 의정활동 정보 공개제도 도입

- 『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』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 통합 공개(상·하반기)

5

단위과제별 일정표

세부 추진과제	단위과제	'19년	'20년	'21년				'22년
				1/4	2/4	3/4	4/4	
1. 자치입법권 강화	① 의회 운영 관련 자율성 강화							
2.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	① 인사권 독립방안 마련							
3.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	① 의정활동 지원 정책 지원 전문인력 확충							
4. 의정활동 정보공개	①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설치							
	② 의정활동 정보공개제도 도입							

(5-2) 자치조직권 강화 및 책임성 확보

1 종합계획 주요내용

< 기본 방향 >

-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조직의 자율성·탄력성을 확대함으로써 주민 생활서비스의 질 개선 도모
- 주민 중심의 조직관리·진단 강화를 통해 조직·인력 운영상의 책임성 확보 및 전문성·효율성 강화 추진

《 지방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 》

- 지방조직제도의 불합리한 제한 개선으로, 기구·정원규정 등에는 자치단체 간 형평성 및 균형 유지를 위한 최소기준만 존치

■ 불합리한 제한 규정 및 조직관리제도 개선 과제

- 자치단체 부단체장 정수 및 통솔범위 개선
- 실·국·본부 수 인구 구간 개선
- 적정인력 산출을 위한 행정수요 지표 추가 개발
- 직속기관, 하부행정기관 등 관련 기구설치 자율성 확대
- 전문임기제 운영 개선, 의회사무기구 관련 기준 개선 등

- 자치단체 재정 독립성 등과 연계해 기구설치 자율성 확대

- 민간 전문가 중심 위원회를 통해 자율성 확대 방안 마련

■ 연계 검토과제

- 자치단체별 재정 독립성 확보(예 : 독립채산제) 방안, 지방공무원 보수 자율화 방안, 국가-지방공무원 연금제도 개선 방안 등

- 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 제도화로 운영상의 책임과 의무 명확화

- 인수위의 대상과 기한, 소관업무, 위원 정수 등

《 지방조직 책임성 및 전문성·효율성 강화 》

- (성과지표 기반 관리) 성과 중심의 인력·조직 관리를 위해 주민 삶과 직결된 성과지표 산출·공개
 - 핵심성과지표 비교·공개 : 소방·복지·생활안전 등 주민접점 주요 분야의 핵심성과지표*를 마련하여 자치단체별로 비교·공개
 - * (예) 119소방차량 골든타임(7분) 도착률, 인구 1천명당 찾아가는 복지상담 지원건수 등
 - 신규인력 성과평가 : 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산정 시 자치단체별 여건에 맞는 성과지표를 선정하고 목표치를 제시하는 성과협약 체결
- (조직진단 강화) 소방·사회복지 등 주요 충원분야에 대해 조직, 인사 및 일하는 방식을 포함한 특정·정밀진단 실시
- (주민·의회 공개 확대) 자치단체 기구·정원관리 운영 현황에 대한 지방의회 제출 의무화, 언론·주민 공개대상 조직정보 확대

2 2021년 추진 목표

- 지방조직제도의 불합리한 제한규정 등의 개선으로 조직운영의 탄력성 및 자율성 제고
 - 성과기반 인력관리 및 조직진단 강화로 주민 접점 분야의 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
 - 자치단체장 인수위원회 제도화
 -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('22.1.13.)에 맞추어 자치단체별 인수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 제정 준비
- ※ 민선7기 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시 노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사례 관리

□ 자치단체 조직설치·운영의 자율성 확대

① 지방조직 자율성 단계적 확대방안 마련 및 시행

- 지방조직 자율성 추가확대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(~'21.12월)
- 지자체 조직 자율성 확대를 위한 기구정원규정 개정(~'21.12월)

□ 자치단체 조직 자율성 확대에 따른 책임성 강화

① 자치단체 10대 핵심성과지표를 통한 성과기반 인력관리

- '20년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10대 핵심성과지표 개선사항 검토 및 '21년 운영방향 확정(~'21.7월)
- 자치단체 핵심성과지표별 우수사례 선정 및 공유(~'21.12월)
- 자치단체의 기구·정원관리 등 지방조직 주요 정보에 대한 주민 및 지방의회 공개 확대방안 마련(~'21.12월)

② 신규인력 충원에 따른 성과협약* 체결 등 성과기반 인력관리

* 지역별 주요 배치인력과 관련하여 주민 서비스 제고 등 성과목표 제시 및 성과달성 여부를 평가

- '21년도 자치단체별 인력충원 성과목표 확정('20.10월)에 따른 관리('21.1월~)
- '21년도 충원실적 분석, '22년도 기준인건비 반영(~'21.10월)
- '22년도 자치단체별 인력충원 성과목표(안) 협의(~'21.10월)

③ 소방·복지 등 주요 분야 특정·정밀진단 강화

- 신규 인력 충원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주요 분야에 대해 특정·정밀진단 실시, 정책현장에서의 서비스 질 개선 도모(~'21.12월)
- '21년 자치단체 조직 분석·진단 연구용역 실시('21.5월~12월)

□ 자치단체장 인수위원회 제도화

① 자치단체장 인수위원회 제도화

- 자치단체별 인수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 제정준비 지원
 - 조례 작성 예시안 마련 및 자치단체 제공(~'21.10월)
- ※ 민선 8기 자치단체장부터 인수위원회 제도화 적용 추진

4

향후 추진 방안 및 일정

< 2022년 >

□ 자치단체 조직 설치·운영의 자율성 확대

① 지방조직 자율성 단계적 확대방안 마련 및 시행

- 지방조직 자율성 추가 확대 방안 마련 및 제도개선 검토(~'22년)

□ 자치단체 조직 자율성 확대에 따른 책임성 강화

① 자치단체 10대 핵심성과지표를 통한 주민서비스 중심 인력관리

- 전년도 성과실적 취합·분석 및 공개를 통하여 현장·주민 서비스 중심으로 인력운용이 이루어지도록 지원(매년)

② 신규인력 충원에 따른 성과협약 체결 등 성과기반 인력관리

- 지역별 특색에 부합하는 자체 인력충원 성과지표 선정·관리를 통한 자율적인 인력운영·관리 도모(매년)

③ 자치단체 조직 운영실태 분석·진단 강화

- 연간 약 25개 자치단체 선정, 조직 분석·진단 연구용역 실시(매년)

□ 자치단체장 인수위원회 제도화

① 자치단체별 인수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 제정 지원('22년~)

5

단위과제별 일정표

세부 추진과제	단위과제	'19년	'20년	'21년				'22년
				1/4	2/4	3/4	4/4	
1. 자치단체 조직설치·운영의 자율성 확대	① 지방조직 자율성 단계적 확대방안 마련 및 시행							
2. 자치단체 조직 자율성 확대에 따른 책임성 강화	① 자치단체 10대 핵심 성과지표를 통한 성과기반 인력관리							
	② 신규인력 충원에 따른 성과협약 체결 등 성과기반 인력관리							
	③ 소방·복지 등 주요분야 특정·정밀진단 강화							
3. 자치단체장 인수위원회 제도화	① 자치단체장 인수위원회 제도화							

(5-3) 지방인사제도 자율성 및 투명성 확보

1 종합계획 주요내용

< 기본 방향 >

- 인사자율성 확대를 통해 자치단체별 특성에 맞는 탄력적 인사운영 강화
- 인사제도 운영 현황 공개 확대 등을 통해 주민 알권리 확대 및 투명성 확보

○ 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지방인사제도의 자율성 강화

- 채용·성과·보수 등 인사제도 전반에 지방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차별화된 개선안 마련, 조직·재정과 연계하여 단계적 확대

■ 주요 검토사항(예시)

- (채용시험) 지자체별 인재상에 적합한 인력선발을 위해 시험과목 자율화 등
- (공직분류) 지역 여건에 맞게 조례로 직렬 신설·통합, 계급체계 자율화 등
- (성과관리) 성과평가 방식 등을 자치단체별로 자유롭게 설정
- (보수·수당) 직급별 보수·수당, 근무조건 등을 지자체별로 규정(재정 독립성과 연계)

○ 자치단체별 인사운영 현황 공개 확대를 통한 투명성 확보

- ‘지방인사통계 통합시스템’ 구축 및 자치단체별 인사현황 공개 확대

- (인사현황 공개 대상) 5종('17) → 10종('18) → 25종('19)
- (일본사례) 임용, 인사평가, 급여, 근무시간, 휴직, 징계, 복무, 퇴직 등 공개

2 2021년 추진 목표

□ 지방인사제도 투명성 확보

○ 자치단체별 인사현황 공개 확대를 통한 투명성 확보

-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한 인사운영 공개를 확대하고, 이를 종합 분석하여 행안부 ‘내고장알리미’ 사이트에 공개

※ 근거법령: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8조(인사 및 시험에 관한 통계의 공개)

- 인사현황 공개대상 확대: 10종('19) → 15종('20) → 25종 이상('21)
-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지자체 인사운영의 우수 사례를 공개하고 우수사례집을 통해 타 지자체에 전파

-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투명성 확보
 - 분리운영중인 인사-복무시스템 통합으로 연가보상비, 초과근무수당, 여비 지급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
 - 정현원관리, 인사명부, 희망인사, 임용관리, 평정관리, 연봉산정 등의 인사업무 전 수명주기에 대한 완전 전산화
 - 인사·급여·복무 등 코드 표준화를 통한 전국 단위 통계 산출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동일 기준으로 비교·분석 가능하도록 함
- ※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2단계(응용/SW개발) 완료 목표

3 2021년 추진 방안 및 일정

□ 지방인사제도 투명성 확보

① 인사운영 현황 공개 확대

- ‘ 시도 인사통계 실무협의회’를 통한 인사통계 공개 대상 항목 및 공개범위 협의(‘21.3월)
- ‘20년말 기준, ‘지방자치단체 인사통계’ 책자 발간(‘21.6월)
- ‘20년말 기준, ‘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인사통계’ 발간(‘21.6월)
- 시·도별 공무원 시험·인사운영에 관한 25종 핵심지표 인사통계를 ‘내고장알리미’ 사이트에 공개(~‘21.12월)

②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

- 17개 시도 광역형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반환경 조사(‘21.5월)
-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 2단계(응용/SW개발) 진행
 - 인프라 구매 및 설치(7월), 시범기관 선정(10월), 중간보고(10월), 완료보고(12월)
- 맞춤형 인사컨설팅 용역사업 실시로 인사관리 실태분석 및 기관 행정수요에 맞는 인사운영시스템 구축 지원
 - 계약체결 및 착수보고(6월), 중간보고(8월), 완료보고(10월)

4

향후 추진 방안 및 일정

< 2022년 >

□ 지방인사제도 투명성 확보

①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

- 17개 시도 대상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안정화('22.하반기)
- 시도 및 시군구 업무 담당자 대상 권역별 교육('22.하반기)
-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사업(3단계) 최종 완료보고('22.하반기)

5

단위과제별 일정표

세부 추진과제	단위과제	'19년	'20년	'21년				'22년
				1/4	2/4	3/4	4/4	
1. 자율성 강화	① 지방인사제도 전반의 차별화된 개선안 마련('19년 완료)							
	②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인사관리 체계 개편('20년 완료)							
2. 투명성 확보	① 지방인사통계 통합 시스템 구축('19년 완료)							
	② 자치단체별 인사현황 공개 확대							
	③ 차세대 표준지방인사 정보시스템 구축							

- 사업기간 : '20년~'22년(3개년 간)
- 사업예산 : 356억 원(응용SW개발 149억, HW·상용SW 등 207억)
- 추진기관 : 행정안전부 및 243개 지방자치단체 공동
- 주요 추진내용
 - 전 인사업무 자동화 및 기능개선으로 인사업무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
 - 복무시스템 통합, 공무원관리시스템 도입 등 지자체 인사역량 강화 등

<차세대 시스템 단계별 구축내용>

1단계('20년)	2단계('21년)	3단계('22년)
예산 : 6,757백만원	예산(안) : 26,365백만원	예산(안) : 2,549백만원
▶핵심기능 분석/설계 (인사,급여,복무,공무직 등)	▶핵심기능 구축/시험 (인사,급여,복무,공무직 등) ▶권역별 인프라 구축	▶추가기능 분석/설계/ 구축/시험 ▶시스템 운영 안정화

- 응용시스템(SW) 기능강화 및 개선
 - (복무시스템 통합) 시도·서울시스템의 복무업무 통합으로 수당·연가·평가 업무의 체계적인 관리 가능
 - (공무원 역량 관리 강화) 현 공통SW의 제약사항으로 개발이 불가능 인사명부, 희망인사 등 기능 및 성과 중심의 성과·경력관리 등 기능 구현
 - (사용자 편의성 제공) 신기술, 기능정보기술(챗봇, 모바일 등) 활용으로 혁신적인 인사 서비스 제공 등
 - (기타) 정현원관리, 임용관리, 평정관리, 연봉산정 등에 대한 완전 전산화
- HW강화 : 시도(시·군·구 포함) 인사 단독형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
 - 광역지자체 중심 인사 단독형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으로 인사업무에 최적화된 환경 운영 및 유연성 확보

(5-4) 지방공무원 전문성 강화

1 종합계획 주요내용

< 기본 방향 >

- 지방인사시스템 혁신으로 지방공무원 전문성 및 주민서비스 품질 제고
- (인력관리) 베이비붐세대 퇴직 등 인력구성 변화와 자치단체별 특성에 맞는 인력관리계획(채용·승진·경력개발 등) 수립
- (채용) 직무중심 선발시스템 및 면접 강화 등 채용제도 개편
 - * 공직가치관 검증 및 평가, 선발예정 직류·업무별 특성에 적합한 구조화된 면접질문지 개발 및 면접전문위원 육성 등
- (보직) 직무특성에 따라 장기근무형(전문가형)과 순환근무형(관리자형)으로 보직관리 이원화, 전문직위 인센티브 부여(평정시 가산점) 등
- (교육) 신규·승진자 등 경력단계별 맞춤형 교육 강화, 대상자별 교육 기법 및 커리큘럼 다양화 및 이를 위한 관계법령 정비
 - * 임용후보자·시간선택제·개방형직위에 대한 신규자교육 신설, 비공무원대상 교육 도입

2 2021년 추진 목표

□ 채용시스템 개편

- 직무중심 선발시스템으로 채용제도 개편을 위해 면접시험 개선 방안 검토
-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자격증 가산점 및 자격증 명칭 현행화 지속 추진

3

2021년 추진 방안 및 일정

□ 채용시스템 개편

① 선발시스템 개편

- 직무중심 채용제도 개편을 위한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개선방안 검토
- 계획 수립, 자치단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 개선방안 검토(~'21.12월)

② 자격증 가산점 정비

-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 등 개·폐지된 자격증 사항을 반영한 자격증 가산점 정비 검토(~'21.12월)

4

향후 추진 방안 및 일정

< 2022년 >

□ 채용시스템 개편

① 자격증 가산점 정비

- 국가기술자격 법령 개정 등 개·폐지 자격증 사항 반영 정비(~'22년)

5

단위과제별 일정표

세부 추진과제	단위과제	'19년	'20년	'21년				'22년
				1/4	2/4	3/4	4/4	
1. 인력관리 및 전문성 강화	① 자치단체 인력관리 계획 수립('19년 완료)							
	② 공직전문성 강화 위한 관련규정 개정('20년 완료)							
2. 채용시스템 개편	① 선발시스템 개편							
	② 자격증 가산점 정비							
3. 지방공무원 교육 강화	① 경력단계별 맞춤형 교육 강화 및 대상자별 커리큘럼 다양화('20년 완료)							

(5-5)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 제고

1 종합계획 주요내용

< 기본 방향 >

- 자치분권 시대에 부합하는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자율성 보장
- (지방재정관리제도의 합리적 개선) 자치단체 재정운영과 관련한 지방재정관리제도를 자율성 확대 등을 통해 주민중심으로 개선 추진
- (예산편성의 자율성 확대)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지방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예산편성의 자율성 제고
- (지방채무 관리제도 개편) 채무 한도액 설정 및 초과발행 자율성 확대
 - 지방채발행 한도액 설정주체를 자치단체장으로 변경(現 행안부장관)
 - 한도액 초과발행 시 행정안전부장관 승인에서 협의로 변경
- (교육경비 보조제한 완화 검토)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 제한 규정 완화 검토

2 2021년 추진 목표

□ 지방재정관리제도의 합리적 개선

- 긴급 재난수요 적기 대응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등의 지방기금제도 개선
-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주요재정사업 사전심사 제도 등 개선

□ 지방채무 관리제도 개편

-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지방채무제도 개선

□ 교육경비 보조제한 완화 검토

- 자체수입을 통한 인건비 미해결 단체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 제한 (교육부 소관 『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』, 대통령령) 관련,
 - 자치단체 등 의견수렴을 통해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자율성을 확대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방안 검토

※ 다만,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지방재정 여건 등 고려 필요

3 2021년 추진 방안 및 일정

□ 지방재정관리제도의 합리적 개선

- 긴급 재난수요 적기 대응 및 지방재정 자율성 제고를 위한 재난 관리기금 운영 개선 추진(지자체 의견수렴 등) : ~'21. 12월

※ 예) 의무예치금액(현행 10배 초과시 5%만 예치) 단계적 완화, 기금 사용 특례범위 확대 등

- 지방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 등 개선 추진(지자체 의견수렴 등) : ~'21. 12월

※ 예) 비대면 사업(대면 사업에서 비대면 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등)에 대한 평가지표 신설, 인센티브 방안 마련 등

□ 지방채무 관리제도 개편

- 자치단체 의견 수렴, 지방채 운영현황 분석 등을 통한 지방채무 제도 개선 추진 : ~'21. 12월

※ 예) 지방채 발행 한도액(현행 10%) 상향, 관리채무비율 제도개선* 등

*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채무증가에 대한 한시적 채무관리비율 산정 예외 인정 등

□ 교육경비 보조제한 완화 방안 검토

-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기초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제한 완화 관련 추가 의견수렴(~'21.7월)

※ '예산편성운영기준' 개정 토론회 등 활용하여 자치단체 협의

- 현황분석 및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교육경비 보조제한 완화 방안 검토 및 마련(~'21.12월)

※ 방안 확정 및 시행령 개정 여부는 자치단체 동의 여부(코로나19로 인한 재정여건 고려)에 따라 별도 검토

4

향후 추진 방안 및 일정

< 2022년 >

□ 지방재정관리제도의 합리적 개선

- 지방재정관리제도 개선 방안 지속 검토(지자체 의견 수렴 등)

□ 지방채무 관리제도 개편

- 지방채무 관리 상황 점검 및 개선방안 지속 도출

5

단위과제별 일정표

세부 추진과제	단위과제	'19년	'20년	'21년				'22년
				1/4	2/4	3/4	4/4	
1. 지방재정 관리제도	① 지방재정관리제도의 합리적 개선							
2. 예산편성 자율성	① 예산편성의 자율성 확대('19년 완료)							
3. 지방채무 관리제도	① 지방채무 관리제도 개편							
4. 교육경비 보조제한	① 교육경비 보조제한 완화 검토							

(5-6) 지방재정정보 공개 및 접근성 확대

1 종합계획 주요내용

< 기본 방향 >

- 재정운용 계획 및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접근성을 확대하여 재정 책임성 강화

○ 재정정보 공개 및 접근성확대를 통한 지방재정 책임성 확보

- (채무) 매년 자치단체장이 지방채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, 주민이 채무현황 및 상환계획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'지방재정 365' 공개
- (투자사업) 투자심사시기·사업비·진행상황 등을 '지방재정 365' 공개
 - ※ 일부 대규모 투자사업이 중앙심사 통과 후 중단·지연 등 재정손실 유발
- (재정사업 성과공개) 지방재정 사업운영에 따른 구체적이고 결과 지향적인 성과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성과 책임 향상 도모
- (접근성 강화) 주민생활과 밀접한 재정정보*를 주민이 알기 쉽고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관심과 이해도 제고
 - * 채무, 투자사업, 원가정보 등

2 2021년 추진 목표

○ 재정정보 공개 범위 확대

- (채무) 자치단체별 『채무관리계획*』을 작성, 『지방재정365』 공개
 - * 지방채 차입·상환 실적 및 계획, 향후 5개년 간 지방채 발행 및 상환계획, 채무의 증감 전망과 관리계획 등 포함
- (투자사업) 대규모 투자사업(500억 이상 투자사업, 중투 심사 완료사업) 중 중단·지연 등 재정손실 유발사업을 선정, 『지방재정365』 공개

○ 재정사업 성과공개 및 접근성 강화

- 주민의 주요관심 재정정보의 공개, 시각화·도식화 등 정보조회 편의성 향상을 통해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주민의 이해제고 및 재정투명성·책임성 확보

○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추진

- 지방재정업무 및 대민서비스에 대한 업무현황 분석 및 프로세스 정의·화면 UI설계 등 시스템 구축을 위한 분석·설계 추진

3

2021년 추진 방안 및 일정

□ 재정정보 공개 범위 확대

① 채무관리계획, 투자사업 등 재정정보 공개

- (채무) 채무관리계획 작성 대상 자치단체 확정 및 공개(~'22.1.)
- (투자사업) 대규모 투자사업 중 재정손실 유발사업 선정·공개(~'22.1.)

□ 재정사업 성과공개 및 접근성 강화

① 예·결산 재정공시 확대

※ (재정공시) 예산 2월말/ 결산 8월말, (통합공시) 예산 4월말, 결산 10월말

- 『지방보조금법』 제정*에 따른 지방보조금 관련 재정정보 공개범위 등 확대(~'22.12.)

* 지방보조금법 및 동법 시행령('21.7. 시행 예정)

-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에 따른 재정정보 공개 확대(~'21.12.)
 - 재정공시 이행상황 점검을 통한 미비점 개선·보완

※ 관련 : 지방재정법제60조(지방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등)제1항제10호의2
(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및 주민의견서)('20.1.29.시행)

② 정보접근성 및 이용편의 향상

- 『지방재정365』 재정통계지표의 시각화·도식화 추가 및 보완(~'21.12.)
- 이용자의 불편 해소 및 편리성 향상을 위한 웹사이트 품질관리* 점검 및 조치(분기별)
 - * 다양한 웹브라우저 지원(호환성), 최단 접속(접속성), 이용자 편의(편의성) 등
- 『지방재정365』 웹 접근성 품질인증* 갱신(~'21.10.)
 - * (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) 장애인 및 고령자가 웹 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 표준지침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부여

③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추진(총 3단계 구축, 1·2단계)

- (1단계)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분석(~'21.5.)
 - 예산·회계·결산 등 재정업무 및 대민서비스(공개, 온라인대금청구) 등 업무 현황 분석 및 기능별 요구사항 상세정의
- (2단계)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설계(~'21.12.)
 - 1단계 분석을 바탕으로 DB, 화면 UI, 시스템 연계 인터페이스 등 상세설계 실시

4 향후 추진 방안 및 일정

< 2022년 >

□ 재정정보 공개 범위 확대

① 채무관리계획, 투자사업 등 재정정보 공개

- (채무) 채무관리계획 작성 대상 자치단체 확정 및 공개(~'22.12.)
- (투자사업) 대규모 투자사업 중 재정손실 유발사업 선정·공개(~'22.12.)

□ 재정사업 성과공개 및 접근성 강화

① 예·결산 재정공시 확대

- 지방보조금 관련 통합공시 방식 등 마련 및 공개(~'22.12.)
- 주민참여예산제도 이행상황 점검 등을 통한 미비점 개선·반영(~'22.12.)

② 정보접근성 및 이용편의 향상

- 『지방재정365』 재정통계지표의 시각화·도식화 추가 및 보완(~'22.12.)
- 이용자의 불편 해소 및 편리성 향상을 위한 웹사이트 품질관리* 점검 및 조치(분기별)
- * 다양한 웹브라우저 지원(호환성), 최단 접속(접속성), 이용자 편의(편의성) 등
- 『지방재정365』 웹 접근성 품질인증* 갱신('22.10.)

③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추진(총 3단계 구축, 2·3단계)

-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설계(2단계, '21.6.~'22.5.)
 - 1단계 분석을 바탕으로 재정업무 및 대민서비스 분야 DB, 화면 UI, 시스템 연계 인터페이스 등 기본(상세) 설계 실시
-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개발·테스트(3단계, '22.6.~'23.12.)
 - 지방재정·보조금 등 업무별 기능 개발 및 테스트(~'23.12.)
 - 지방보조사업 서비스 오픈('23.1.) ※ 지방재정 전 기능 오픈('24.1.)

5

단위과제별 일정표

세부 추진과제	단위과제	'19년	'20년	'21년				'22년
				1/4	2/4	3/4	4/4	
1. 재정정보 공개 확대	① 채무관리계획, 투자사업 등 재정정보 공개							
2. 공개 개선 방안 마련	① 공개범위 및 방법 등 개선방안 마련							
	② 차세대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예타 대응 및 예산 확보('19년 완료)							
	③ 차세대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분석·설계 및 구축·시범운영							

(5-7) 자치분권형 평가체계 구축

1 종합계획 주요내용

< 기본 방향 >

- 지방이 스스로 평가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자치분권형 평가체계 구축

○ 자치분권형 평가체계 기반 구축을 위한 합동평가 제도 개선

- 주민이 알기 쉽도록 평가지표 단순화 및 지표 수 감축
- ‘실시간 합동평가 시스템’ 도입으로 평가절차를 자동화하여 자치단체의 평가업무 부담을 완화하고, 정보공개 시스템을 통합 구축하여 평가 정보를 주민에게 실시간 공개

○ 지역 스스로 실시하는 자치분권형 평가체계 구축

- (지방) 자치단체가 독립적인 평가기구를 통해 스스로 평가하되,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민참여 및 정보의 활용 가능성 확대
 - * 직무상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지방 감사위원회에서 자치단체 평가와 감사를 함께 수행하는 방안 검토
- (중앙)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결과 공개 시스템 제공, 자치단체 평가 사후 모니터링 등 평가 기반을 제공하는 역할 수행
 - * 국민이 알고자 하는 필수지표는 중앙에서 개발, 의무적으로 평가·공개하고, 주민이 알고자 하는 지표는 자치단체가 스스로 개발하여 평가·공개

- '21년 자치분권형 지자체 합동평가 기간 단축 및 결과 조기 공개
 (('20년) 7월 → ('21년) 4월)
 - 평가 결과를 지자체가 당해연도 업무 추진 방식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기간 단축 및 평가결과 조기 공개 추진
 - ※ (기존) 평가결과 6월말 발표 → (개선) 평가결과 3월 완료, 4월 발표
-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지표 수정을 통해 지자체 평가부담 경감
 -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업무여건 변화, 지자체 방역업무 차질 우려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·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지표 조정 검토
- 국민 눈높이에 맞춘 실질적인 국민평가 확대
 - (평가단 구성) 지역, 연령, 성별 등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하여 일반적인 국민의 시각을 반영할 수 있는 국민평가단 구성
 - (평가분야 확대) 국민평가단이 100% 평가하는 부문 지정, 향후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표에 대한 국민평가 분야 확대 검토
 - ※ (기존) 평가단이 선정한 우수사례 중에서 국민평가단이 우수사례 5건 선정
 (개선) 코로나19 대응 우수사례 평가(시범 실시) → 이후 평가분야 확대 검토
- 평가결과의 수용성 및 환류성 제고
 - 정책 추진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의 성과 창출 의욕 제고를 위해 인센티브 및 컨설팅 지원 강화
 - * 전년도와 비교한 실적 상승도를 평가하여 인센티브(교부세 및 포상) 제공
 - 중앙부처가 평가결과를 정책 개선에 활용하도록 부처별 정책 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각 부처의 정책 환류 실태 점검

□ 자치분권형 평가체계 마련 및 평가

① 자치분권형 평가 실시

○ 자치분권형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개발 추진

- '22년('21년 실적)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검증 및 내적 정합성 제고(~'21년 연중)
 - ※ '21년 실적지표 확정 및 각 중앙부처·지자체 既통보('20.11.2.)
- 코로나19 상황 반영 '22년('21년 실적)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조정 추진(~'21.4월)
- '23년('22년 실적)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개발 추진(~'21.9월)

○ 자치분권형 지자체 합동평가 실시

- '21년('20년 실적) 지자체 합동평가 실시('21.1~3월)
- 코로나19 우수사례에 대한 국민평가단 평가 실시('21.1~3월)
- '21년('20년 실적)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대국민 공개(~'21.4월)
- '22년('21년 실적) 지자체 합동평가 실시계획 수립·통보(~'21.9월)
 - ※ '20~'22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 및 2021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에 부합하는 지표개발 추진 및 합동평가 실시계획 수립 예정

○ 자치분권형 지자체 합동평가 후속조치 추진

- 평가결과에 따른 시·도별 행정컨설팅 실시('21.8~9월)
- 평가결과보고서* 및 우수사례 성과보고서 작성('21.9월)
 - * 중앙부처 정책개선계획, 지자체별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 등에 반영하고 다음연도 평가지표 개발·검증 시 활용

4

향후 추진 방안 및 일정

< 2022년 >

□ 자치분권형 평가체계 마련 및 평가

① 자치분권형 평가 실시

- 자치분권형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개발 추진(~매년 3분기)
- 자치분권형 지자체 합동평가 실시(~매년 4월)
- 자치분권형 지자체 합동평가 후속조치 추진(~매년 3분기)

5

단위과제별 일정표

세부 추진과제	단위과제	'19년	'20년	'21년				'22년
				1/4	2/4	3/4	4/4	
1. 합동평가 제도개선	① 온라인 합동평가 시스템 시범 운영('19년 완료)							
2. 자치분권형 평가체계 마련 및 평가	① 자치분권형 평가체계 마련('20년 완료)							
	② 자치분권형 평가 실시							

(5-8) 자치단체 형태 다양화

1 종합계획 주요내용

< 기본 방향 >

- 주민투표 등 주민의사에 따라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를 선택하는 제도 마련
- 유형별 운영모델 등 도입방안 및 우선실시 방안 마련 등

- 인구, 재정 등 다양한 자치단체 유형을 고려, 기관구성 표준모델(안) 마련
- 지방자치법, 개별법, 자치법규 등 법제화 방안 마련
- 인구감소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희망지역 우선실시 추진

2 2021년 추진 목표

- 자치단체 기관구성 변경 표준모델(안) 마련
- <(가칭) 『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에 관한 특별법』> 제정 추진

3 2021년 추진 방안 및 일정

□ 기관구성 표준모델 마련

- 전문가 의견 및 외국 유사 사례 검토를 통한 표준모델 마련(21.상반기)
 - 전문가 자문단 구성·운영 및 영국·미국·일본·프랑스·독일 등 5개국 자치단체 기관구성 사례 조사 및 분석

- 기관구성 형태 변경을 위한 다양한 추진방안 검토('21.하반기)
 -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시행방안 연구용역 추진 및
시행방안(개시·공론화·합의 절차 및 적용시기 등) 검토
 - 표준모델 및 검토사항을 바탕으로 자치단체 등 지역 의견 수렴

□ 법제화 방안 마련

- <(가칭) 『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에 관한 특별법』 제정안>
마련 및 입법 추진(~'21.12월)
 - 전문가 자문, 외국 사례 조사,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제정안
마련 및 입법추진

□ 희망지역 우선실시

- 입법완료시 자치단체별 지역특성*에 따른 유형별 적합성·실행가능성
등을 고려한 표준모델(안) 적용 검토(~'21.12월)

* 광역·기초, 인구규모(100만이상, 100~50만, 50~10만, 10만 미만), 도시·농촌 등

4

향후 추진 방안 및 일정

< 2022년 >

- <(가칭) 『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에 관한 특별법』> 제정 후 의견
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희망지역 우선 실시

세부 추진과제	단위과제	'19년	'20년	'21년				'22년
				1/4	2/4	3/4	4/4	
1. 기관구성 표준모델 마련	① 자치단체 유형을 고려한 표준모델 마련							
2. 법제화 방안 마련	① 지방자치법, 개별법 등 마련							
3. 희망지역 우선실시	① 지역여건에 따라 희망지역 우선실시							

6.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

6-1.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 모색

6-2.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 모색

(6-1)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 모색

1 종합계획 주요내용

< 기본 방향 >

-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 계층의 적정화
- 주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자치구역의 조정
- 자치단체의 규모와 자치역량에 부합하는 역할과 기능의 부여

- (사례분석) 세계 각국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동향 조사 및 성과분석
 -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, 행정효율성 제고 등 지방행정체제개편 성과분석 등
- (개편방안 모색) 자치환경 변화에 따른 자치 및 행정계층의 적정화, 자치구역의 조정, 자치분권시대에 부응하는 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 강화방안 등에 대한 학계·자치단체 등의 개편방안 수렴 및 모색
- (주민참여 절차 강화) 동일 시·도 내의 시·군·구 간 경계조정의 경우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시·도조례 위임, 자치단체의 명칭변경과 폐치분합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과정에서 주민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주민참여 절차 개선

2 2021년 추진 목표

- 행정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 모색
- 생활권 중심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통한 주민 편의 제고
 -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 등 불합리한 행정구역 대상 신속한 경계조정 기반 마련

□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 모색

- 광역시·도 간 자율통합, 분도 관련 논의 분석(~'21.6월)
- 자치단체·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정책 방향 모색(~'21.12월)

□ 주민참여 절차 강화 및 경계변경 제도 개선

-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경계변경 시 자율협의 절차 구체화 방안 마련
 - 『지방자치법』 개정('20.12.9.)에 따른 경계변경 자율협의 근거조항이 신설되어 시행령 개정을 통한 자율협의 절차 구체화 방안 마련(~'21.12월)
 - 전문가 자문·경계변경 사례 분석 등을 통한 경계변경 신청사유 등 검토(~'21.6월)
- 경계변경 사무 성격 분석 등을 통한 시·도 내 경계변경의 시·도 조례 위임 필요성 등 경계변경 관련 제도개선 검토(~'21.12월)

※ (주민참여절차 강화) 행정구역 경계조정시 자문단 운영 및 주민의견 청취 근거마련(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 완료, '20.4.1)

< 2022년 >

□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 모색

-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 시 관련 법령 개정 등 개편 절차 지원(연중)

□ 주민참여 절차 강화 및 경계변경 제도 개선

- 경계변경 자율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통한 경계변경 추진
 - 자치단체 담당자 대상 경계변경 자율협의체 제도 교육(~'22.6월)
 - 제도 운영 과정에서 보완필요사항 발굴 시 보완 추진(~'22.12월)

5

단위과제별 일정표

세부 추진과제	단위과제	'19년	'20년	'21년				'22년
				1/4	2/4	3/4	4/4	
1.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 모색	①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모색							
	② 주민참여 절차 강화 및 경계변경 제도 개선							

(6-2)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 모색

1 종합계획 주요내용

< 기본 방향 >

- 민주적·합리적 선거제도 개선으로 주민에 대한 책임성·신뢰도 제고
- 민주적·합리적인 선거제도 개편방안 모색
 - 선거구제, 정당공천제, 비례대표제, 교육감 선거제도 등의 개편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국회와 협력하여 추진
- 자치단체장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검토
 - 재·보궐선거 원인제공자의 선거비용 일부 부담, 당선무효자의 반환 받은 기탁금 등 환수 강화
 - 합리적인 연임 허용 범위 등

2 2021년 추진 목표

행 정 안 전 부

- 국회(특위)의 선거제도 개편 관련 논의 등 활동 지원
-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발전방안 마련

교 육 부

- 민주적·합리적인 (교육감) 선거제도 개편방안 모색
 - 교육감 후보자의 알릴 기회 및 유권자의 알권리 확대 등 지방선거 제도의 공정성 개선 검토
 - ※ (예시) TV·인터넷을 통한 토론회, 후보자 정보 공개 등

□ 선거제도 개편방안 모색

행 정 안 전 부

① 민주적·합리적인 선거제도 개편방안 모색

- 국회 광역의원 정수 산정·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 별표2 개정 지원*('21.9월)

* 국회(특위 내 소위) 업무보고, 행정구역 인구통계 현황 등 자료 제공, 선거구 획정 및 의원정수 산정 등에 대한 실무 지원·대응

- 국회 기초의원 시·도별 총정수 산정 관련 공직선거법 별표3 개정 지원*('21.9월)

* 국회(특위 내 소위) 업무보고, 행정구역 인구통계 현황 등 자료 제공, 선거구 획정 및 의원정수 산정 등에 대한 실무 지원·대응

- 공직선거법 개정 등 지방선거제도 개편 관련 국회 논의 지원

②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발전방안 마련

교 육 부

① 민주적·합리적인 (교육감) 선거제도 개편방안 모색

- 선거 공영제 확대 등 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*('21.6~12.)

* (내용) 교육감 후보의 알릴 기회 및 유권자의 알권리 확대 구체적 방안과 투표율 제고 등 선거 공영제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

- 연구용역 결과를 활용하여 교육감 선거('22.6월)시 제도개선 및 활용 가능성 등 검토

< 2022년 >

□ 선거제도 개편방안 모색

행 정 안 전 부

① 민주적·합리적인 선거제도 개편방안 모색

- 지방선거제도 개편 관련 지원, 공직선거법 개정 모니터링(~'22.6월)
- 선거제도 개선 관련 국회(특위) 논의 지원(연중)
- 선거제도 개선 관련 선관위 협의·지원(연중)

②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발전방안 마련

교 육 부

① 민주적·합리적인 (교육감) 선거제도 개편방안 모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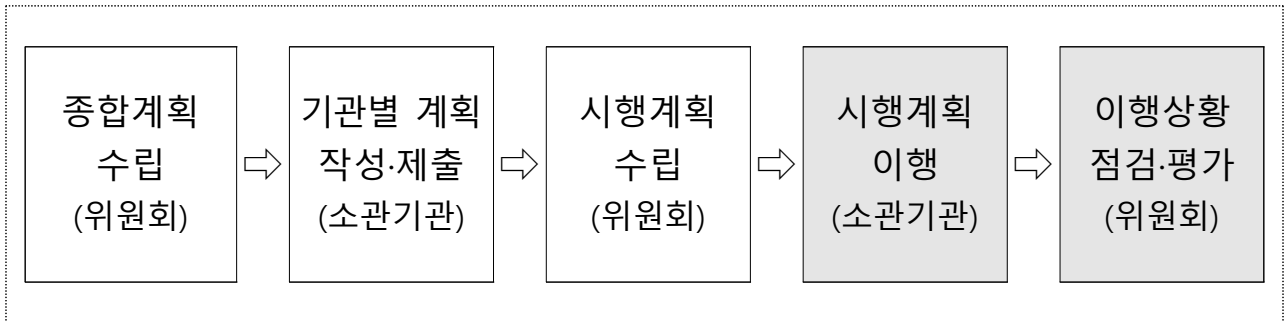
-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제도 개선 중장기 추진(~'22)
- 국회와 협력해 교육감 선거 공영제 확대 등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(~'22)

세부 추진과제	단위과제	'19년	'20년	'21년				'22년
				1/4	2/4	3/4	4/4	
1. 선거제도 개편방안 모색	① <행정안전부> 민주적·합리적인 선거제도 개편방안 모색							
	② <행정안전부>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발전방안 마련							
	③ <교육부> 민주적·합리적인 (교육감) 선거제도 개편방안 모색							

제3장 향후 조치계획

1

계획 수립 및 이행 절차



2

일정별 조치 계획

□ 『2021년 자치분권 시행계획』 통보

- 2021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통보('21.3월)
- 과제 소관 기관에서는 통보된 시행계획에 따라 과제 이행

□ 이행상황 점검·평가 실시

- 이행상황 점검·평가계획 수립·통보('21.4월)
- 추진상황 중간점검('21.7월)
- 연간 이행상황 최종 평가('21.12월~'22.2월)

□ 이행상황 점검·평가 후속조치

- 이행상황 평가결과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보고(~'22.3월)

참 고 자 료

참고 1

과제별 주관부처 및 협조부처

추진 과제 명	세부 추진 과제	단 위 과 제	소관기관	
			주 관	협 조
(1-1) 주민참여권 보장	1. 주민자치 원리 강화	(1-1)-1-① 주민자치 원리 강화	행정안전부	
	2. 주민 참여권 신설	(1-1)-2-① 주민참여 권리 신설	행정안전부	
		(1-1)-2-② 정보공개 종합규정 마련	행정안전부	
	3. 지역별 자치분권 협의회 구성·운영	(1-1)-3-① 지역별 자치분권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원 추진	자치분권 위원회	행정안전부
(1-2) 숙의 기반의 주민참여 방식 도입	1. 숙의 민주주의 중심의 주민참여 확산	(1-2)-1-① 숙의 기반 주민참여 운영 매뉴얼 및 제도화 방안 마련	행정안전부	
		(1-2)-1-② 숙의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대상별 맞춤형 교육 지원	행정안전부	
		(1-2)-1-③ 숙의기반 주민참여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	행정안전부	
(1-3)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	1. 주민자치회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	(1-3)-1-① 주민자치회 설치 및 재정지원 근거 마련	행정안전부	
		(1-3)-1-② 주민자치회 제도 개선 및 활성화	행정안전부	
	2. 주민참여 중심의 행정혁신	(1-3)-2-① 마을 단위 지원사업 지원 체계 개선을 위한 범정부 협력 강화	행정안전부	
		(1-3)-2-② 주민자치회 지역 내 공공 및 민간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	행정안전부	
		(1-3)-2-③ 주민 전자투표 등 모바일 주민참여 시스템 도입	행정안전부	
(1-4) 조례 제·개정 주민직접발안 제도 도입	1.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제도 개선	(1-4)-1-① 청구 요건 및 절차 완화	행정안전부	
(1-5) 주민소환 및 주민감사청구 요건의 합리적 완화	1. 주민소환 제도 개선	(1-5)-1-① 주민소환 청구요건 및 개표요건 합리적 조정	행정안전부	
		(1-5)-1-② 주민소환 청구대상자에 비례대표 지방의원 확대 검토	행정안전부	
		(1-5)-1-③ '주민소환투표운동 및 서명 요청 활동의 제한' 규정 개선 검토	행정안전부	
	2. 주민감사청구 제도 개선	(1-5)-2-① 주민감사 청구요건 합리적 조정	행정안전부	
		(1-5)-2-② 주민감사 청구연령 하향 검토	행정안전부	
		(1-5)-2-③ 감사 청구 가능기간 연장	행정안전부	

추진 과제 명	세 부 추진 과제	단 위 과 제	소 관 기 관	
			주 관	협 조
(1-6) 주민투표 청구 대상 확대	1. 주민투표 개선 방안 마련	(1-6)-1-① 주민투표 청구 대상 확대 검토	행정안전부	
		(1-6)-1-② 온라인 청구방식 도입	행정안전부	
		(1-6)-1-③ 주민투표 개표요건 완화	행정안전부	
(1-7) 주민참여예산 제도 확대	1. 주민참여예산기구 설치 확대	(1-7)-1-① 주민참여예산기구 설치 확대	행정안전부	
	2. 주민참여 범위 확대	(1-7)-2-① 주민참여 범위 확대	행정안전부	
	3. 주민참여 운영모델 개발·확산	(1-7)-3-① 주민참여 운영 모델 개발·확산	행정안전부	
(2-1) 중앙-자치단체간 사무 재배분	1. 국가-자치사무 배분 원칙 및 기준 명확화	(2-1)-1-① 국가-자치사무 배분 원칙 및 기준 명확화	행정안전부	
	2. 국가사무와 자치 사무의 이원화 추진	(2-1)-2-①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이원화 추진	행정안전부	자치분권 위원회
	3. 광역·기초단체 간 사무배분 합리화	(2-1)-3-① 광역·기초단체 간 사무 배분 합리화	행정안전부	자치분권 위원회
(2-2) 중앙권한의 기능 중심 포괄 이양	1. 중앙권한의 기능 중심 지방이양 추진	(2-2)-1-① 중앙권한의 기능 중심 지방이양 추진	자치분권 위원회	행정안전부
	2.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방이양 추진	(2-2)-2-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방이양 추진	행정안전부	자치분권 위원회
	3.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추진	(2-2)-3-①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추진	행정안전부	자치분권 위원회
	4. 이양 사무에 대한 인력 재정 병행이전 제도화	(2-2)-4-① 이양 사무에 대한 인력· 재정 병행이전 제도화	행정안전부	자치분권 위원회
(2-3) 자치분권 법령 사전협의제 도입	1. 자치단체와 관련된 제·개정 법령 사전 심사 확대	(2-3)-1-① 자치단체와 관련된 제·개정 법령 사전심사 확대	행정안전부	
	2. 사전협의 제도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	(2-3)-2-① 사전협의 제도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	행정안전부	
(2-4) 특별지방행정 기관 정비	1.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추진	(2-4)-1-①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추진	행정안전부	자치분권 위원회
	2. 자치단체와 특별 지방행정기관 간의 협업 제도화	(2-4)-2-① 자치단체와 특별지방 행정기관 간의 협업 제도화	행정안전부	
(2-5) 대도시 특례 확대	1. 대도시 특례 확대	(2-5)-1-① 대도시 특례 추가 발굴	자치분권 위원회	행정안전부
		(2-5)-1-② 대도시 특례 법제화 추진 점검	자치분권 위원회	행정안전부
		(2-5)-1-③ 대도시 행정적 명칭 부여	행정안전부	자치분권 위원회

추진과제명	세부추진과제	단 위 과 제	소관기관	
			주 관	협 조
(2-6) 광역단위 자치 경찰제 도입	1. 자치경찰제 법제화 및 대내·외 공감대 형성	(2-6)-1-① 경찰법 개정 등 법제화	경찰청	행정안전부
		(2-6)-1-② 자치경찰제도 운영방안 마련	경찰청	행정안전부
		(2-6)-1-③ 대내·외 공감대 형성	경찰청	행정안전부
(2-7) 교육자치 강화 및 지방자치와의 연계협력 활성화	1. 교육자치와 지방 자치 연계·협력 활성화	(2-7)-1-① 지방교육기관과 자치 단체연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	행정안전부	교육부
		(2-7)-1-② 시·도 및 교육청 간 인사교류 관련 지침 개정	행정안전부	교육부
	2. 유·초·중등교육 권한의 이양	(2-7)-2-① 유·초·중등교육 권한의 이양	교육부	
	3. 교육자치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	(2-7)-3-① 교육자치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	교육부	
	4.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·협력 활성화	(2-7)-4-① 교육협력 거버넌스 구축	교육부	행정안전부
(3-1) 국세·지방세 구조 개선	1. 지방소비세 비중 확대	(3-1)-1-① 지방소비세 비중 확대 추진	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	
		(3-1)-1-② 지방소비세 배분지표의 합리화 검토	행정안전부	
	2.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	(3-1)-2-①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추진	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	
	3. 기타 세목 조정	(3-1)-3-①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검토	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	
	4. 재정 균형 장치 마련	(3-1)-4-① 특정지역 세수집중 완화 위한 재정균형장치 마련	행정안전부	
(3-2) 지방세입 확충 기반 강화	1. 지방세 신세원 발굴	(3-2)-1-① 지역자원 시설세 과세 확대 추진, 지역자원 시설세·레저세 등 신규 과세대상 발굴	행정안전부	
	2. 지방세제 및 세정 합리적 개선	(3-2)-2-① 지방세발전위원회 구성·운영	행정안전부	
		(3-2)-2-② 자치단체별 세목 조정	행정안전부	
		(3-2)-2-③ 납세자보호관 제도 강화	행정안전부	
		(3-2)-2-④ 차세대 지방세정보 시스템 구축	행정안전부	
	3. 지방세 비과세·감면율 15% 수준 관리	(3-2)-3-① 지방세 비과세·감면율 15% 수준 관리	행정안전부	
	4.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	(3-2)-4-①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	행정안전부	
		(3-2)-4-②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	행정안전부	
		(3-2)-4-③ 표준수수료 부과요율 등 합리화	행정안전부	

추진과제명	세부추진과제	단 위 과 제	소관기관	
			주 관	협 조
(3-3)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	1. 기부금 세액공제 등 혜택부여 방안	(3-3)-1-① 기부금 도입 및 세액 공제 등 혜택부여 방안	행정안전부	
	2. 기부금 모집 및 활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	(3-3)-2-① 기부금 모집 및 활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	행정안전부	
	3. 기부제 운영지원 종합 정보시스템 구축	(3-3)-3-① 기부제 운영지원 종합 정보시스템 구축	행정안전부	
(3-4) 국고보조사업 개편	1. 국가책임 강화 추진	(3-4)-1-① 국가적 사업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추진	기획재정부	보조사업 등 관계부처
	2. 지방사업화 추진	(3-4)-2-① 지역특화사업 등 지방이양 추진	기획재정부	관계부처
	3. 원칙 기준 수립	(3-4)-3-① 기준보조율 체계 개선 및 지방부담 합리화	기획재정부	관계부처
		(3-4)-3-② 성과관리체계 수립	기획재정부	관계부처
		(3-4)-3-③ 지방재정부담 사전심의 강화	행정안전부	
(3-5) 지방교부세 형평 기능 강화	1. 지방교부세율 상향	(3-5)-1-①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 등 균형발전 재원으로서의 역할 강화	행정안전부	
	2. 제도개선 추진	(3-5)-2-① 세입확충 자구노력 유인 등 제도개선 추진	행정안전부	
(3-6) 지역상생발전 기금 확대 및 합리적 개편	1. 종합 발전방안 마련	(3-6)-1-① 재원확대·균형장치를 포함한 종합 발전방안 마련	행정안전부	
	2. 배분기준 개선	(3-6)-2-① 배분기준 개선	행정안전부	
(4-1) 중앙-지방 협력기구 설치·운영	1. 설치 근거 마련	(4-1)-1-① 지방자치법 개정	행정안전부	
		(4-1)-1-②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	행정안전부	
	2. 설치·운영	(4-1)-2-① 시도지사간담회 및 중앙 지방정책협의회 운영(법 제개정 前)	행정안전부	
		(4-1)-2-②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·운영(법 제개정 後)	행정안전부	
(4-2) 자치단체 간 협력 활성화 지원	1. 새로운 협력제도 마련	(4-2)-1-①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도입	행정안전부	
		(4-2)-1-② 자치단체 간 협약제도 도입	행정안전부	
		(4-2)-1-③ 자치단체 간 기관시설의 공동 활용 검토	행정안전부	
		(4-2)-1-④ 행정협의회 제도 개선 추진	행정안전부	
		(4-2)-1-⑤ 지방자치단체조합 제도 개선 추진	행정안전부	
		(4-2)-1-⑥ 행재정적 지원 근거 및 방안 마련	행정안전부	

추진 과제 명	세 부 추진 과제	단 위 과 제	소 관 기 관	
			주 관	협 조
(4-3) 제주·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	<제주특별자치도> 1.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고도의 자치권 보장	(4-3)-1-① 지역주민의 삶과 밀접한 환경·투자·관광·교통·문화·산업·복지· 미래성장동력 분야 사무 등 이양	국무조정실	관계부처· 제주특별 자치도
		(4-3)-1-② 자치, 조세, 재정, 금융 분야 등 분권과제 발굴 및 법적 특례 부여	국무조정실	제주특별 자치도
	<제주특별자치도> 2. 도민의 자기결정· 책임성 강화 및 직접민주주의 활성화	(4-3)-2-① 지방정부 형태, 계층 구조, 선거제도 등에 대한 자기 결정권 부여	행정안전부	제주특별 자치도
		(4-3)-2-② 도의회 기능 및 감사 위원회 독립성 강화	행정안전부	제주특별 자치도
		(4-3)-2-③ '주민 중심의 분권 모델' 완성	행정안전부	제주특별 자치도
		(4-3)-2-④ 제주형 자치경찰제 완성도 제고	행정안전부	경찰청· 제주특별 자치도
	<제주특별자치도> 3. 제주특별법 위임조례 확대로 자치입법권 강화	(4-3)-3-① 제주특별법 위임조례 확대로 자치입법권 강화	행정안전부	제주특별 자치도
	<세종특별자치시> 4. 세종특별자치시 맞춤형 자치모델 구축	(4-3)-4-① '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' 추진	행정안전부	세종특별 자치시
		(4-3)-4-② 세종형 자치경찰제 시범 도입	행정안전부	경찰청· 세종특별 자치시
		(4-3)-4-③ 맞춤형 권한 이양	행정안전부	관계부처· 세종특별 자치시
		(4-3)-4-④ 자치조직 운영 자율성 확대	행정안전부	
(5-1)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의정활동정보 공개	1. 자치입법권 강화	(5-1)-1-① 의회 운영 관련 자율성 강화	행정안전부	
	2.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	(5-1)-2-① 인사권 독립방안 마련	행정안전부	
	3.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	(5-1)-3-① 의정활동 지원 정책 지원 전문인력 확충	행정안전부	
	4. 의정활동 정보공개	(5-1)-4-①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설치	행정안전부	
		(5-1)-4-② 의정활동 정보공개제도 도입	행정안전부	

추진 과제 명	세부 추진 과제	단 위 과 제	소관기관	
			주 관	협 조
(5-2) 자치조직권 강화 및 책임성 확보	1. 자치단체 조직설치·운영의 자율성 확대	(5-2)-1-① 지방조직 자율성 단계적 확대방안 마련 및 시행	행정안전부	
	2. 자치단체 조직 자율성확대에 따른 책임성 강화	(5-2)-2-① 자치단체별 10대 핵심 성과 지표를 통한 성과기반 인력관리	행정안전부	
		(5-2)-2-② 신규인력 충원에 따른 성과 협약 체결 등 성과기반 인력관리	행정안전부	
		(5-2)-2-③ 소방·복지 등 주요분야 특정·정밀진단 강화	행정안전부	
	3. 자치단체장 인수위원회 제도화	(5-2)-3-① 자치단체장 인수위원회 제도화	행정안전부	
(5-3) 지방인사제도 자율성 및 투명성 확보	1. 자율성 강화	(5-3)-1-① 지방인사제도 전반의 차별화된 개선안 마련	행정안전부	
		(5-3)-1-②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인사관리 체계 개편	행정안전부	
	2. 투명성 확보	(5-3)-2-① 지방인사통계 통합 시스템 구축	행정안전부	
		(5-3)-2-② 자치단체별 인사운영 현황 공개 확대	행정안전부	
		(5-3)-2-③ 차세대 표준지방인사 정보 시스템 구축	행정안전부	
(5-4) 지방공무원 전문성 강화	1. 인력관리 및 전문성 강화	(5-4)-1-① 자치단체 인력관리계획 수립	행정안전부	
		(5-4)-1-② 공직전문성 강화 위한 관련 규정 개정	행정안전부	
	2. 채용시스템 개편	(5-4)-2-① 선발시스템 개편	행정안전부	
		(5-4)-2-② 자격증 가산점 정비	행정안전부	
	3. 지방공무원 교육 강화	(5-4)-3-① 경력단계별 맞춤형 교육 강화 및 대상자별 커리큘럼 다양화	행정안전부	
(5-5)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 제고	1. 지방재정관리제도	(5-5)-1-① 지방재정관리제도의 합리적 개선	행정안전부	
	2. 예산편성자율성	(5-5)-2-① 예산편성의 자율성 확대	행정안전부	
	3. 지방채무관리제도	(5-5)-3-① 지방채무 관리제도 개편	행정안전부	
	4. 교육경비 보조제한	(5-5)-4-① 교육경비 보조제한 완화 검토	행정안전부	
(5-6) 지방재정정보 공개 및 접근성 확대	1. 재정정보 공개 확대	(5-6)-1-① 채무관리계획, 투자사업 등 재정 정보 공개	행정안전부	
	2. 공개 개선 방안 마련	(5-6)-2-① 공개범위 및 방법 등 개선방안 마련	행정안전부	
		(5-6)-2-② 차세대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예타 대응 및 예산 확보	행정안전부	
		(5-6)-2-③ 차세대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분석설계 및 구축시범 운영	행정안전부	

추진과제명	세부추진과제	단 위 과 제	소관기관	
			주 관	협 조
(5-7) 자치분권형 평가체계 구축	1. 합동평가제도 개선	(5-7)-1-① 온라인 합동평가시스템 시범 운영	행정안전부	
	2. 자치분권형 평가 체계마련 및 평가	(5-7)-2-① 자치분권형 평가체계 마련	행정안전부	
		(5-7)-2-② 자치분권형 평가 실시	행정안전부	
(5-8) 자치단체 형태 다양화	1. 기관구성 표준모델 마련	(5-8)-1-① 자치단체 유형을 고려한 표준모델 마련	행정안전부	
	2. 법제화 방안 마련	(5-8)-2-① 지방자치법, 개별법 등 마련	행정안전부	
	3. 희망지역 우선실시	(5-8)-3-① 지역여건에 따라 희망 지역 우선 실시	행정안전부	
(6-1)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 모색	1.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 모색	(6-1)-1-①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 모색	행정안전부	
		(6-1)-1-② 주민참여 절차 강화 및 경계변경 제도개선	행정안전부	
(6-2)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 모색	1. 선거제도 개편방안 모색	(6-2)-1-① <행정안전부> 민주적·합리적인 선거제도 개편 방안 모색	행정안전부	교육부
		(6-2)-1-② <행정안전부>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발전방안 마련	행정안전부	교육부
		(6-2)-1-③ <교육부> 민주적·합리적인(교육감) 선거제도 개편방안 모색	교육부	행정안전부

참고 2 과제별 추진일정표

세부 추진과제	단위과제	'19년	'20년	'21년				'22년
				1/4	2/4	3/4	4/4	
(1-1) 주민참여권 보장								
1. 주민자치 원리 강화	① 주민자치 원리 강화 (‘20년 완료)							
2. 주민 참여권 신설	① 주민참여 권리 신설 (‘20년 완료)							
	② 정보공개 종합규정 마련							
3. 지역별 자치 분권협의회 구성·운영	① 지역별 자치분권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원 추진							
(1-2) 숙의 기반의 주민참여 방식 도입								
1. 숙의 민주주의 중심의 주민참여 확산	① 숙의 기반 주민참여 운영 매뉴얼 및 제도화 방안 마련 (‘20년 완료)							
	② 숙의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공무원 교육 지원							
	③ 숙의 기반 주민참여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							
(1-3)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								
1. 주민자치회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	① 주민자치회 본격실시 근거 마련							
	② 주민자치회 제도 개선 및 활성화							
2. 주민참여 중심의 행정혁신	① 마을 단위 지원사업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범정부 협력 강화							
	② 주민자치회 지역 내 공공 및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							
	③ 주민 전자투표 등 모바일 주민참여 시스템 도입 (‘19년 완료)							

세부 추진과제	단위과제	'19년	'20년	'21년				'22년
				1/4	2/4	3/4	4/4	
(1-4) 조례 제·개정의 주민직접발안제도 도입								
1.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제도 개선	① 청구 요건 및 절차 완화							
(1-5) 주민소환 및 주민감사청구 요건의 합리적 완화								
1. 주민소환 제도 개선	① 주민소환 청구요건 및 개표요건 합리적 조정							
	② 주민소환 청구대상자에 비례대표 지방의원 확대 검토							
	③ 주민소환투표운동 및 서명요청활동의 제한 규정 개선 검토							
2. 주민감사청구 제도개선	① 주민감사 청구요건 합리적 조정							
	② 주민감사 청구연령 하향 검토							
	③ 감사청구 가능기간 연장							
(1-6) 주민투표 청구대상 확대								
1. 주민투표 개선방안 마련	① 주민투표 청구대상 확대 검토							
	② 온라인 청구방식 도입							
	③ 주민투표 개표요건 완화							

세부 추진과제	단위과제	'19년	'20년	'21년				'22년
				1/4	2/4	3/4	4/4	
(1-7)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								
1. 주민참여 예산 기구 설치 확대	① 주민참여예산기구 설치 확대							
2. 주민참여 범위 확대	① 주민참여 범위 확대 ('19년 완료)							
3. 주민참여 운영 모델 개발·확산	① 주민참여 운영 모델 개발·확산							
(2-1) 중앙-자치단체 간 사무 재배분								
1. 국가·자치사무 배분 원칙 및 기준 명확화	① 국가-자치사무 배분 원칙 및 기준 명확화							
2.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이원화 추진	①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이원화 추진							
3. 광역기초단체 간 사무배분 합리화	① 광역기초단체 간 사무 배분 합리화							
(2-2) 중앙권한의 기능 중심 포괄 이양								
1. 중앙권한의 기능 중심 지방이양 추진	① 중앙권한의 기능 중심 지방이양 추진							
2.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방 이양 추진	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방이양 추진							
3. 지방일괄 이양법 제정 추진	①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추진							
4. 이양사무에 대한 인력·재정 병행 이전 제도화	① 이양사무에 대한 인력·재정 병행이전 제도화							

세부 추진과제	단위과제	'19년	'20년	'21년				'22년
				1/4	2/4	3/4	4/4	
(2-3) 자치분권 법령 사전협의제 도입								
1. 자치단체와 관련된 제·개정 법령 사전심사 확대	① 자치단체와 관련된 제·개정 법령 사전심사 확대							
2. 사전협의 제도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	① 사전협의 제도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('19년 완료)							
(2-4)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								
1. 특별지방행정 기관 정비 추진	①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추진							
2. 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 기관 간의 협업 제도화	① 자치단체와 특별지방 행정기관 간의 협업 제도화							
(2-5) 대도시 특례 확대								
1. 대도시 특례 확대	① 대도시특례 추가 발굴							
	② 대도시 특례 법제화 추진 점검							
	③ 대도시 행정적 명칭 부여							
(2-6)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								
1. 자치경찰제 법제화 및 대내·외 공감대 형성	① 경찰법 개정 등 법제화							
	② 자치경찰제도 운영방안 마련							
	③ 대내·외 공감대 형성							
(2-7) 교육자치 강화 및 지방자치와의 연계·협력 활성화								
< 행정안전부 >								
1.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·협력 활성화	① 지방교육기관과 자치 단체 연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							
	② 시도 및 교육청간 인사 교류 관련 지침 개정							

세부 추진과제		단위과제	'19년	'20년	'21년				'22년
					1/4	2/4	3/4	4/4	
< 교육부 >									
1. 유·초·중등 교육 권한의 이양	① 유·초·중등교육 권한의 이양								
2. 교육자치에 대한 주민 참여 확대	① 교육자치에 대한 주민 참여 확대								
3.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·협력 활성화	① 교육협력 거버넌스 구축								
(3-1) 국세·지방세 구조 개선									
1. 지방소비세 비중 확대	① 지방소비세 비중 확대 추진('19년 완료)								
	② 지방소비세 배분지표의 합리화 검토('19년 완료)								
2.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	①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추진								
3. 기타 세목 조정	①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검토								
4. 재정 균형 장치 마련	① 특정지역 세수집중 완화 위한 재정 균형장치 마련 ('19년 완료)								
(3-2) 지방세입 확충 기반 강화									
1. 지방세 신세원 발굴	①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 추진, 지역자원 시설세 등 신규 과세 대상 발굴								
2. 지방세제 및 세정 합리적 개선	① 지방세발전위원회 구성·운영								
	② 자치단체별 세목 조정								
	③ 납세자보호관 제도 강화('19년 완료)								
	④ 차세대 지방세정보 시스템 구축								

세부 추진과제	단위과제	'19년	'20년	'21년				'22년
				1/4	2/4	3/4	4/4	
3. 지방세 비과세 감면율 15% 수준 관리	① 지방세 비과세·감면율 15% 수준 관리							
4.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	①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('19년 완료)							
	②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							
	③ 표준수수료 부과요율 등 합리화('20년 완료)							
(3-3)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								
1. 기부금 세액 공제 등 혜택 부여 방안	① 기부금 도입 및 세액 공제 등 혜택부여 방안							
2. 기부금 모집 및 활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	① 기부금 모집 및 활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							
3. 기부제 운영 지원 종합 정보시스템 구축	① 기부제 운영지원 종합 정보시스템 구축							
(3-4) 국고보조사업 개편								
1. 국가책임 강화 추진	① 국가적 사업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추진							
2. 지방사업화 추진	① 지역특화사업 등 지방이양 추진							
3. 원칙기준 수립	① 기준보조율 체계 개선 및 지방부담 합리화							
	② 성과관리체계 수립							
	③ 지방재정부담 사전심의 강화							

세부 추진과제	단위과제	'19년	'20년	'21년				'22년
				1/4	2/4	3/4	4/4	
(3-5) 지방교부세 형평 기능 강화								
1. 지방교부세율 상향	①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 등 균형발전 재원으로서의 역할 강화							
2. 제도개선 추진	① 세입확충 자구노력 유인 등 제도개선 추진							
(3-6)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및 합리적 개편								
1. 종합 발전 방안 마련	① 재원확대·균형장치를 포함한 종합 발전방안 마련('19년 완료)							
2. 배분기준 개선	① 배분기준 개선 ('20년 완료)							
(4-1) 중앙-지방 협력기구 설치·운영								
1. 설치근거 마련	① 지방자치법 개정 ('20년 완료)							
	②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							
2. 설치·운영	① 시·도지사간담회 및 중앙·지방정책협의회 운영(법 제·개정 前)							
	②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· 운영(법 제·개정 後)							
(4-2) 자치단체 간 협력 활성화 지원								
1. 새로운 협력제도 마련	①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도입							
	② 자치단체 간 협약제도 도입							
	③ 자치단체 간 기관·시설의 공동활용 검토							
	④ 행정협의회 제도 개선 추진('20년 완료)							
	⑤ 지방자치단체조합 제도 개선 추진('20년 완료)							
	⑥ 행·재정적 지원 근거 및 방안 마련							

세부 추진과제	단위과제	'19년	'20년	'21년				'22년
				1/4	2/4	3/4	4/4	
(4-3) 제주·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								
< 국무조정실 >								
1. 포괄적 권한 이양으로 고도의 자치권 보장	① 지역주민의 삶과 밀접한 환경·투자·관광· 교통·문화·산업·복지· 미래성장동력 분야 사무 등 이양							
	② 자치, 조세, 재정, 금융 분야 등 분권과제 발굴 및 법적 특례 부여							
< 행정안전부 >								
■ 제 주								
2. 도민의 자기 결정·책임성 강화 및 직접민주주의 활성화	① 지방정부 형태, 계층 구조, 선거제도 등에 대한 자기결정권 부여							
	② 도의회 기능 및 감사 위원회 독립성 강화							
	③ '주민 중심의 분권모델' 완성							
	④ 제주형 자치경찰제 완성도 제고							
3. 제주특별법 위임조례 확대로 자치입법권 강화	① 제주특별법 위임조례 확대로 자치입법권 강화							
■ 세 중								
4. 세종특별 자치시 맞춤형 자치모델 구축	① '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' 추진							
	② 세종형 자치경찰제 시범 도입							
	③ 맞춤형 권한 이양							
	④ 자치조직 운영 자율성 확대							

세부 추진과제	단위과제	'19년	'20년	'21년				'22년
				1/4	2/4	3/4	4/4	
(5-1)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의정활동정보 공개								
1. 자치입법권 강화	① 의회 운영 관련 자율성 강화							
2.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	① 인사권 독립방안 마련							
3.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	① 의정활동 지원 정책 지원 전문인력 확충							
4. 의정활동 정보공개	①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설치							
	② 의정활동 정보공개제도 도입							
(5-2) 자치조직권 강화 및 책임성 확보								
1. 자치단체 조직설치·운영의 자율성 확대	① 지방조직 자율성 단계적 확대방안 마련 및 시행							
2. 자치단체 조직 자율성 확대에 따른 책임성 강화	① 자치단체 10대 핵심 성과지표를 통한 성과기반 인력관리							
	② 신규인력 충원에 따른 성과협약 체결 등 성과기반 인력관리							
	③ 소방·복지 등 주요분야 특정·정밀진단 강화							
3. 자치단체장 인수위원회 제도화	① 자치단체장 인수위원회 제도화							
(5-3) 지방인사제도 자율성 및 투명성 확보								
1. 자율성 강화	① 지방인사제도 전반의 차별화된 개선안 마련 ('19년 완료)							
	②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인사관리 체계 개편 ('20년 완료)							

세부 추진과제	단위과제	'19년	'20년	'21년				'22년
				1/4	2/4	3/4	4/4	
2. 투명성 확보	① 지방인사통계 통합 시스템 구축('19년 완료)							
	② 자치단체별 인사현황 공개 확대							
	③ 차세대 표준지방인사 정보시스템 구축							
(5-4) 지방공무원 전문성 강화								
1. 인력관리 및 전문성 강화	① 자치단체 인력관리 계획 수립('19년 완료)							
	② 공직전문성 강화 위한 관련규정 개정('20년 완료)							
2. 채용시스템 개편	① 선발시스템 개편							
	② 자격증 가산점 정비							
3. 지방공무원 교육 강화	① 경력단계별 맞춤형 교육 강화 및 대상자별 커리큘럼 다양화('20년 완료)							
(5-5)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 제고								
1. 지방재정 관리제도	① 지방재정관리제도의 합리적 개선							
2. 예산편성 자율성	① 예산편성의 자율성 확대('19년 완료)							
3. 지방채무 관리제도	① 지방채무 관리제도 개편							
4. 교육경비 보조제한	① 교육경비 보조제한 완화 검토							
(5-6) 지방재정정보 공개 및 접근성 확대								
1. 재정정보 공개 확대	① 채무관리계획, 투자사업 등 재정정보 공개							
2. 공개 개선 방안 마련	① 공개범위 및 방법 등 개선방안 마련							
	② 차세대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예타 대응 및 예산 확보('19년 완료)							
	③ 차세대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분석·설계 및 구축·시범운영							

세부 추진과제	단위과제	'19년	'20년	'21년				'22년
				1/4	2/4	3/4	4/4	
(5-7) 자치분권형 평가체계 구축								
1. 합동평가 제도개선	① 온라인 합동평가 시스템 시범 운영('19년 완료)							
2. 자치분권형 평가체계 마련 및 평가	① 자치분권형 평가체계 마련('20년 완료)							
	② 자치분권형 평가 실시							
(5-8) 자치단체 형태 다양화								
1. 기관구성 표준모델 마련	① 자치단체 유형을 고려한 표준모델 마련							
2. 법제화 방안 마련	① 지방자치법, 개별법 등 마련							
3. 희망지역 우선실시	① 지역여건에 따라 희망지역 우선실시							
(6-1)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 모색								
1.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 모색	①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모색							
	② 주민참여 절차 강화 및 경계변경 제도 개선							
(6-2)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 모색								
1. 선거제도 개편방안 모색	① <행정안전부> 민주적·합리적인 선거제도 개편방안 모색							
	② <행정안전부>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발전방안 마련							
	③ <교육부> 민주적·합리적인 (교육감) 선거제도 개편방안 모색							